

제42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7일(수)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부별심사: 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1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1  
- 부별심사: 경제부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부별심사: 경제부처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9월 1일 월요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지난 한 해 동안의 국가 살림살이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인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의 경제 분야 재정 사업들에 대한 집행 내용과 성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9월 1일 월요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확정하지 못한 결산소위 명단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 추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간사님, 김성희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국민의힘은 박형수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이상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박형수 간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소위원회 심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종합질의에서 먼저 국군의 문제를 제가 거론했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가 심화돼서 이제는 지방소멸까지 가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도로망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의 혈관이고 주민생활의 기반입니다.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면 일상적인 권리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존권의 문제가 됩니다.

먼저 도로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도 56번 도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한번 봐 보십시오.

옛말에 구곡양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게 하도 심해서 양의 곱창같이, 양의 창자같이 꾸부러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56번 도로입니다. 강원 북부권과 경기 북부권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저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아주 높습니다. 지역민들은 저 도로를 살인도로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21대 국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추진 진도가 아주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 46호입니다.

양구는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가 전혀 없는 군입니다. 군청 소재지까지 4차선 도로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이것은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 2차선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 40~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춘천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1319명의 응급환자 중 469명이 춘천으로 왔습니다. 약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춘천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도로의 상태를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자기의 면사무소 가는 데만도 1시간 20분이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과거 73년도에 소양강댐이 준공되면서 소양강댐에서 양구까지 교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에 보시는 춘천에 있는 조교리와 물로리라는 곳에서는 홍천으로 돌아서 뺑글뺑글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 면사무소 가는 데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이 책임 소관은 전부 다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수면, 댐에 다리 놓는 것 우리 것 아니다. 환경부도 우리는 그런 도로나 댐을 놓는 것 안 한다. 행안부도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부총리님, 오늘 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 누가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국가가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지난번 21대에도 거론했었고 계속해서 거론도 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해 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다리를 놔 줘야 됩니다. 지금 다리를 놔 주지 않기 때문에 소양강댐이 73년도 막히고 난 이후에 양구까지 중간에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가려면 양구까지 올라가든가 다시 홍천으로 돌아서 춘천을 가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6차 국도와 국지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3차 때는 19개소, 4차 때는 16개소, 5차 때는 11개소로 사업 규모가 계속 축소돼서 지금은 강원도의 반영률은 9.5%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로 보급률 자체가 강원도는 평방킬로미터당 0.58km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접경지역, 폐광지역 그리고 산악지역으로 지역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오히려 더 필요한 곳입니다. 오죽하면 도로를 하나 놓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국토순례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확정하시는데 여기에는 다시 한번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교부장관님 안 나오셨지요? 차관님 나오셨나?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국토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반영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지금 저희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그간에는 교통정체 해소에 중점을 뒀서 경제성 부분에 저희가 강조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지

역균형발전이나 그다음에 지역 불편 해소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께서 국민들이 다 보는데 약속하신 겁니다.

또 PSO 보상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인데 지금 인구가 적은 지방, 오지에 설치된 철도노선은 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으며 경원선은 교통 낙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철도노선이면서 접경지역인 백마고지역까지 이어지는데 충분한 벽지노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저희가 PSO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경원선 부분도 저희도 그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2019년도까지는 연천에서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철도가 운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연천까지 전철사업을 하면서 철도가 중단돼서 지금 7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철원군,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지난 8월 6일 날 해서 일단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빠르면 아마 내년 하반기, 7월쯤이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PSO 사업에 넣어 달라는 것이지요.

차관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추진할 철도 사업을 결정하는 철도 10년 대계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오는 연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10개를 포함해서 건의된 것만 전국 약 1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봐 주십시오.

강원도는 가운데가 험하니 비어 있습니다. 저렇게 비어 있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철도도 지금 예산이 지연 편성돼서 제가 알기로는 27년, 28년, 29년 이렇게 늦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곳은 빨리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토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방사형 구조로 가는데 네트워크형 철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청년은 유출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철도가 돼야지만 공급이 다시 새로운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릉 간 KTX가 2014년도에 예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개통한 이후에 13만 명에서 지금 278만 명으로 22배 탑승인원이 늘었습니다. 경춘선도 2010년도에 개통하고 나서 41만 6000여 명에서 1366만 명으로 33배 늘었습니다. 강릉과 부산 간에

개통된 동해선은 지금 연일 매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타를 했어도 나오지 않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교통이 실제로는 그 예타 확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이것이 바로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1차에 17.3%, 4차에 7%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저렇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끝내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가 아까 도로 부분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강원도도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짚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짧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분들은 허성무 위원님처럼 대기석에 미리 나와 계시다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성산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부총리님, 여러 장관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통계청이 자료로 만든 제조업 사업체 수입입니다. 그 이전 것은 뺐는데요, 20년부터 23년. 20년, 코로나가 막 한창일 때지요. 21년, 22년 끝날 때입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22년에 1.3% 좀 많이 늘었습니다, 공장 수가. 그러다가 23년이 되면 제조업 공장 수가 4만 9000개 정도가 갑자기 감소를 합니다. 올 9월에 이 통계를 또 발표한다는데요 아마 이런 비슷한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제가 살고 있는 창원 국가산단을 보면 공장 매매·임대 플래카드가 온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인근의 공단들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그 플래카드들이 사라지고 매출도 좀 올라가고 수출도 다시 지엽적으로는 회복이 되는……

잘 아시다시피 포항부터 여수까지는 박정희·전두환 시대에는 임해공업벨트라 불렸고 그 이후에는 동남공단벨트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23년 통계를 보면서 저희들이 제조업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러스트벨트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

게 됩니다. 아마 9월 통계에 어떤 통계가 나올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뭔가 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부총리님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관련해서 특별한 상설기구를 좀 만들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분기별로 러스트벨트화되는 데를 지도화해서 좀 발표도 하고 업종별 대응 전략도 수시로 발표도 하는 그런 기민한 정부 주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오늘 이 통계를 보여 드립니다.

부총리님, 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저도 최근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도 할 수 있고 추진력을 갖고 국가 주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는데요. 개정안 통과에 정부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율제조 촉진법 같은 그런 특별법도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따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오늘 총리께서 안 나와서 부총리님께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제조 강국을 위한 디지털 전환하고 AI 전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3대 강국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 그다음에 국력을 세계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발표인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 기재부도 지난 8월 22일 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민간 분야의 AI 대전환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국가산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AI 전환 그다음에 BI 전환, DX·AX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피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전환을 외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다시 몇 년 전부터 AI 전환을 외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이 안 되면 AI 전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디지털 전환하려면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조업만 보면 제조 데이터가 생산되고 수집되고 그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진행돼야 되는 게 스마트팩토리 사업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좀 보여 주시지요.

지금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현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19.5%밖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중견기업은 그나마 85.7%가 됐고요, 중소기업들은 18.6%밖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입 비율이 낮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 정도 수준에서 바로 AI 전환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도입돼 있는 20%도 채 안 되는 이 공장들도 기초 단계가 75%입니다. 그리고 중간이나 중간2·고도화로 넘어가는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20.6%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기초가 없이 중간으로 갈 수 없고 중간이 없이 고도화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 그림을 보여 주시면요.

정부에서 23년도에 주도한 스마트팩토리에겐 기초 단계에 아예 예산이 10원도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안 되어 있고요. 25년 올해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중인데 아마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초가 안 되는데 중간으로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주도형의 기초 편성을 다시 일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중소 상생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들이 주도해서 중소기업들과 같이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24년도부터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25년도 물론 없고요. 내년도도 없을 겁니다.

물론 고도화 예산은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올해 약간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기초 없이 고도화는 불가능하고 고도화 없이 AI 전환도 매우 어렵다. 물론 동시에 추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 보면 공장에서 동시에 추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훨씬 수월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통계를 보여 드리면서 하는 것은 기초 단계의 예산을 다시 좀 편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가는 데 너무나 좋은 슬로건 아닙니까? 당연히 가야 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특히 제조 AI 분야에서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초부터 좀 더 다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까요.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대·중소 협력형 모델이라 해서 대기업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 인력을 파견해서 이 협력 모델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들이 낸 돈,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지금 10%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0% 좀 더 올려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인력들을 투입해서 중소기업의 공장에 가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지도하고 전담인력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세액공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기업들이 자기하고 협력하는 또 협력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들한테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40%가 또 들어가거든요, 구축 과정에. 그러면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나머지 지원받은 비율을 또 소득으로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이 매겨지니까 지원받은 나머지 부분, 자기 40% 외 60% 지원을 대기업이든 정부로부터 반반씩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지 말고 그냥 진행해 주면 중소기업들의 참여율도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법률 개정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기재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총리님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허성무 위원 한성숙 중기부장관님, 이게 주무부처가 중기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사실은 중기부가 이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해 달라, 특히 AI를 융합해서 AI까지 진화하는 부분은 제가 창원시장 시절에 그때 박영선 장관님 때 강력하게 건의했

던 겁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시범적으로 몇 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중앙정부가 받아서 그때 강력하게 추진했던 건데, 장관님은 네이버 출신이고 이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중기부가 좀 더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사실 제가 중소기업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R&D 예산도 삭감되고 기초 단계의 스마트팩토리 예산도 아예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벌어지다 보니 훨씬 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복원하는 부분들은 기재부랑 좀 더 많이 상의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소 협력 모델에 대한 선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기술전문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 관련해서 공장역, 기술전문 기업들의 수준이 좀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시대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하고 WTO 체제로 가면서 국가의 역할보다는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뭔가 국가 주도의 역할들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시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특히 기재부장관님, 경제부처 장관님들의 아주 각별한 국가 주도 역할이 어디에 무엇으로 들어갈 건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기초 수준으로 한 2조 원 정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업을 질적으로 변환해라 해서 고도화 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DX하고 AX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 건건이 가면 속도가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고민이 뭐냐면 업종별로 업종을 묶어 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나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공통으로 플랫폼을 개발해서 다른 소기업,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AX 전환 좀 빨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같이 좀 주도적으로 굉장히 애써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허성무 위원 그런데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을 보면 우리 대기업들의 노력이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도 드리고요.

방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바로 LG그룹이면 자기 협력업체가 같은 기술이니깐 그 군으로 가고, 현대는 현대군으로 가고 포스코는 포스코군으로 가고 삼성은 삼성군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정부의 역할, 주도성을 좀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경북 경산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사실 우리 경제……

○조지연 **위원** 물론 진행 중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진행 중이고요. 지금 당장 시장 분위기라든지 소비심리가 7년 만에 가장 좋아지고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조지연 **위원** 그런데 한 달간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다시 또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에 보면 이게 사실상 매출이 소비쿠폰 풀기 전보다는 더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보도화된 것도 있습니다.

지난 추경을 할 당시에 부총리님은 안 계셨지만 차관님 그때 계셨을 텐데 저는 전 국민 15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SOC 사업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산업이라든지 이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게 총규모가 13조 원 되는 규모인데 그 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역들도 좀 언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경 때 예결위 이 석상에서 드려 놓았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소비쿠폰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받아 가지고 저야말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야 된다고 말한 입장에서 저도 그것 받아서 시장에 가 가지고 삼계탕 끓일 닭을 많이 사 가지고요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삼계탕 봉사한다고 그 더운 날에 우리 봉사단과 함께 열심히 끓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전 국민 15만 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에 더 집중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소비쿠폰 지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소비 증진에 있어서 평가가 좀…… 물론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향후에도 혹시 소비 부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소비쿠폰을 지급할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론 앞서가는 얘기는 합시다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소비쿠폰을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 가지고……

○조지연 **위원** 아니요, 추가적으로 더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현재로서는 지금……

○조지연 위원 저는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말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정부 여당이 정말 발 빠르게 강행 처리한 노조법보다는 청년 고용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쉬었음 청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 고민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쉬었음뿐만이 아니고 청년 고용률도 굉장히 지금 40%대……

○조지연 위원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40%대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어서요……

○조지연 위원 20대의 쉬었음 청년이 42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인구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그 대비 계속해서 쉬었음 청년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고용부장관께서는 청년 고용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물론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까라는 청년 관련된 내역사업들을 다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래서 내일 청년들하고 타운홀 미팅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장관님께서 좋아요, 고공농성장 가시고 이런 노동현장 가시는 것도 좋지 만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하셨던데 저는 이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지 이 사업들이 물론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을 대체할 만한 사업들은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 친구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서 매우 이것이 각광받고 신청들도 많이 하던데……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사업주의 부담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걸 대체할 만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래서 가칭 설레임, 첫걸음제 해서, 이 쉬었음 청년들 보면 한 70% 정도는 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쉬었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초노동질서, 괴롭힘이라든지 체불 없는……

○조지연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부총리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게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물론 한시사업이었는데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상시화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 한해서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지연 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비 보조율은……

○조지연 위원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르게 국비 보조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 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국비 보조율을 더 높일 생각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당정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상시화한다고 했는데 상시화하면 이 50% 정도 국비 보조율 가지고는 지방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8월분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나중 예산을 다시 소급해 가지고 이것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제도 설계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 정부에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비 보조율을 높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단 청년들 월세 보전해 주는 부분의 국비 보조율을 올리게 되면 국가 재원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혜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지연 위원 이거 지방에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유독 대학가를 많이 두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미 고율관세로 자동차업체가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업계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관세가 인상되고 난 다음에 수출실적도 많이 감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업체의 예상되는 추가 관세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9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관세만요. 그런데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부품 자체에 대한 관세도 부과되면서 사실은 이중 압박이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1차, 3차, 4차까지…… 정말 영세한 기업부터 시작해서, 나름 1차 벤더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관세 피해업종 저리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한도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30억, 중견기업 5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니 이것은 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돈도 그냥 이렇게 주는데 왜 빌려주는 것을 그렇게, 상환을 1년 단위로 하면 누가 마음 편하게 돈을 빌리겠습니까?

지금 보증 총량 3조 가운데 8월 13일 기준으로 승인 실적이 3개 기업에 130억밖에 안 됩니다. 0.4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느냐? 물론 홍보도 부족했겠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현장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것도 관계 부처에서 점검을 해 보시고 한번 조정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이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 인하는 동의하시지요?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연장해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세수라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연 위원 지금 무공해차, 그러니까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보조금 신설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상 제가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 김성환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고 그 속도도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전체 비율이 30% 갈 때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전환보조금도 신설해서 전환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 규모에 대해서도 곧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확정된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기재부도 하여튼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설명드리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소비쿠폰을 하지 말고 SOC 투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입니다. 왜냐 그러면 작년 2/4분기가 마이너스고 거의 0%, 0% 하다가 지금 조금 경제가 살아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시중에서 죽을 맛이거든요.

○조지연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SOC에 투자하다 보면 회임기간이 너무 길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지연 위원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4이동통신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어디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여기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니 일단 기본 자격조건이 없는 단순 등록제 방식으로 채택을 한 절차적 하자과 그리고 선정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였고 또 기업사냥꾼 전력이 있는 대표자가 관여했다는 점 또 산업은행과의 사전 협의가 없는 정부 지원 등 대출계획이 있었고 카카오 계열분리 시 자금이 미납되었다는 그런 허위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때 사업 취소와 보증금 몰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이례적인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하자는 우선 PPT에 보시다시피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격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가장 고가의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사업체로 선정을 했고 그것이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며 4300억 원에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실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당시 사업은 등록제, 주파수 경매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장관님, 우선 이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두 번째는 낙찰업체, 즉 스테이지엑스의 심각한 재무적인 문제인데요. PPT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업체들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우선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추진자인 스테이지파이브라는 업체가 사업자 선정 당시에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이와 같이 네 번째 이동통신과 같은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실한 회사였다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이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만든 서상원이라고 하는 과거 이더블유케이(EWK)의 대표가 본인의 상장사를 스테이지엑스라든가 혹은 무자본 M&A를 통해서 기업사냥꾼 방식으로 양수를 받으려고 했더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 결론이 무엇인가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다음 PPT 봐 주실까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스테이지엑스, 사업자로 선정된 자들이 본인의 출자는 하지 않고 봉이 김선달식 수법을 통해서 무조건 고가의 금액을 써서 넘으로써 낙찰 사업자로 선정됐고 그 후행의 절차를 무자본 M&A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자 그냥 사업을 포기하고 도망간 그런 형국인데,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지켜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본금 2050억을 컨소시엄 투자자가 조달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지요.

그에 대한 귀책사유는 컨소시엄 낙찰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그 낙찰자에 대한 보증금도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보증금이 한 4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주요 자금을 확실한 담보를 내거나 현금을 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증권사로만 했더라고요. 서울보증증권이 했고 그다음에 서울보증증권이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4000억을 정부에 몰취당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낙찰 선정 후에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한 계약금이라든가 보증금 몰취 못 하셨지요? 못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 파악을 하고……

○김승원 위원 예, 이것은 좀 파악해 주세요. 사실 이게 전 정권 일이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신 장관님께 하나하나 답변을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 정권 일인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다시 짚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보증금 몰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화 어딘가 정부의 입찰에 참여했다가 본인의 사정으로, 아무튼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몇천억을 몰취당한 사례가 진짜 있습니다. 있었고, 법원에 제소를 했지만 결국에는 한화가 패소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이것을 봐서는 과기정통부가 이 스테이지엑스 사업자에게 보증금 몰취라는 그런 정당한 권리 행사도 안하신 것으로…… 안 하셨습니다, 사실은.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스테이지엑스 뒤에 기업사냥꾼, 무자본 M&A 조달 형식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자가 여기에 관여함으로써 일단은 큰 폭의, 4000억 원이나 넘는 그런 낙찰금을 써냄으로써 일단은 사업권을 받고 그 사업권을 갖고 돈놀이, 제4이동통신 땀으니까 이걸로 자본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4000억 내고 또 스테이지엑스 사업자의 구성원을 변경함으로써 자기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자회사로 변경함으로써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보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인데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과기정통부가 2023년 1월 달에 이동통신사 선정하는 정책에 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자금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낙찰자가, 사업 선정사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과기정통부가 4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산업은행과 논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거기 워딩을 보시면 ‘산업은행을 통해 4000억 원가량의 정책금융을 마련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 사업자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산업은행에 살펴보니 4000억 원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파악하고 따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렇게 갑자기 제4이동통신과 함께 제4인터넷뱅킹이 2023년 2월 달 윤

석열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통신이라든가 금융은 공공재라고 하면서 네 번째 이동통신과 네 번째 인터넷뱅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추진이 됐고 사업이 무산되었어도 그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정당하게 묻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그런 것이 밝혀졌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그 뒤에는 제4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했던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제4이동통신에도 신한은행그룹 계열과 그다음에 더존비즈온이라는 회사가 지분자로서 참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고 또 제4이동통신에도 아이엠에스모빌리티와 함께 신한 쪽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그런 기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PPT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스테이지파이프를 중간에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 3호라고 하는 투자조합의 변경을 시도했는데 이 투자조합에 김건희 측, BP 패밀리라든가 김건희 측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제4이동통신이 사업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든가 수익을 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저희 의원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관님께는 이것에 대한, 이 사업 추진 과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사실 이것도 특검의 수사 대상 혹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기정통부에서 관련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조정훈입니다.

지금 3일째 고생하시는 국무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소비쿠폰 한 번 더 발행하면 안 되냐는 사람들 많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시중에 소비가 살아나니까 아마 그렇게 희망하는……

○조정훈 위원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소비쿠폰 발행 계획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현재로서는.

○조정훈 위원 내년에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경제 상황을 봐서요……

○조정훈 위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무조건 된다 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소비쿠폰을 또 나눠 드릴 가능성이 0은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제가 경제를 잘 관리하도록……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소비쿠폰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소비쿠폰을 발행하게 되면 이걸 경제 운용에 좀 미스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조정훈 위원 얼마 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에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의무화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국고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수십조 규모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지역 자치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선착순으로 갖다 쓰면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지역별로……

○조정훈 위원 할당을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정훈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 SOC는 회수기간이 많이 걸린다, 저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되고요. 또 부총리님 뜻이 없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논리를 만들어 내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비쿠폰이 갖고 있는 큰 부작용의 하나가 중독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1년에,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알아야 빚지지 않고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저축하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갖고 아껴서 아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특

준다 이 말입니다. 기분이 좋지요. 고기 사 드시고 생필품 사 드시지요. 그러면 중독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굉장히 악성입니다. 마약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해 보다가 당기는 겁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제 지역구인 마포 얼마나 가게 많은지 아시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지 않은 돈 이렇게 툭툭 던지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돈 없으니까 더 아껴 살아야지, 합리화시켜야지가 아니라 자꾸 전화하고 언제 돈 또 주냐, 왜 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경제 행태가 바람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조정훈 위원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바람직하진 않지요. 그렇지요? 아니, 이것은 총리님의 수십 년 경제관료로서의 소신 아니십니까? 바람직하진 않지요.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북돋아 줘야지 갑자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전 국민 다 나눠 줬으니까 다 썼으리라고 짐작하는데, 소위 지역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나 각 지자체, 시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표 알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샅니까, 아니면 중산층이 샅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사 가지고 친구들 나눠 줍니까? 이것 확인해보셨습니까? 통계가 있으십니까? 질문입니다,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은 한 분이 너무 많이 사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통계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도대체 각 지역자치단체별로 얼마를 발행했고, 한도 있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대 때 그거 추석 때 깡 하러 갔다가 한 100만 원어치 사 가지고 10만 원 현장에서 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오면 여기에 접근성,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순서로 샅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안 쓰더라도 이걸 역진적이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소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국비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과연 누가 사고 누가 얼마큼 쓰는지를 기재부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데이터 꼭 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장경제, 소상공인들 민생회복 도움 다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소비쿠폰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 행태를 혼드는 정말 마약 같은 소비쿠폰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만 나오신다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SNS 중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쇼츠도 많이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희 자녀들도 아침마다 눈이 빨갛습니다. 11시에 자는 줄 알았더니 인스타 DM 하는 것 보면 2시 3시 4시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2대 들어오자마자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했고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아마 두 번째 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법은 학교에서 SNS에 관한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할 수 없는 것을 강제화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위원장님과 관련된 법입니다. 법 이름은 정보통신망법입니다. 내용은 좀 셉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성년자,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SNS 1일 한도를 설정하고 추천 알고리즘,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실은 저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SNS 중독이 좀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핸드폰 없으면 금단 현상 일으키는 분도 있고요. 이런 중독성 알고리즘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제가 교육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자로 다 했고 이제는 과방위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조 의원님 외에도 안철수 의원님, 김장겸 의원님 등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이 법안을 보면서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2024년에 같은 취지의 법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어떤 법을 통과시킬 때 플러스마이너스 이 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과 손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위……

○조정훈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때로는 새벽 서너 시까지 할 때가 있는데 연령대와 사용시간대 그리고 1일 사용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과기부장관님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 문제, 혹시 팝콘브레인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들어 봤습니다.

○조정훈 위원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뇌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에도 반응을 못 한다고 합니다, 심각해지면. 이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IT 강국 자랑스럽고 좋지만 이런 것을 잘 적절히 대응한 나라가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문체부장관님 계십니까? 차관님 계십니까? 이석하셨습니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스포츠도박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스포츠토트 등을 통해서 빚을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 진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독의 핵심이 이 도박입니다, 온라인 도박. 이걸 좀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이것 막으면 혹시 기재부에서 세수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지요? 설마 애들 중독시켜서 세수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중독성,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오니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SNS 중독돼서 팝콘브레인돼서 길거리에서 신호등도 못 건너고 핸드폰 중독돼서 스포츠도박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빚을 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꼭 좀 빠른, 이번 정기국회 때 진행 가능하면 법률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의 존경하는 박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안 계시는군요.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박상언입니다.

제가 어제의 질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정부의 모든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상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막연히 추구하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집행으로 해당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그저 추상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상언 **위원** 좋아요.

또 마찬가지로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그 집행 성과가 수치상 적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집행으로 해당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점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해당 법률의 목적을 온전히 반영하고 제대로 실현할 때만 성과가 있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이 점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기재부는 우리나라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재정지출이 목표로 하는 부분을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가 예산을 잘 짰나, 못 짰나 그런 부분입니다.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그럼 예산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는 어떻게 평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도 성과목표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도 개발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곽상언 위원** 법률마다 예산을 집행할 텐데 그 지표를 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개발하셔서 향후 입법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볼게요.

지금 법률의 존속기간이 1년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 지속되는 사항들이 많고요. 매년 결산 때마다 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예산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기재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를 합니다. 그게 특정평가라고 해서 아주 세부적 평가를 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법률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기재부가 마음대로 못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지만 저희들 어쨌거나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게 성과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산집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법률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재부는 추후에 법률 개정 의견 혹은 폐지 의견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곽상언 위원** 또 제가 어제 문신학 산자부차관님께 질의드렸는데 혹시 계신가요?

제가 어제 확인한 것에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어제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여쭙봤습니다. 실질적 검토도 했었지만 오늘은 형식적 결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을 검토해 보니까 이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편성해서 조기에 정산되거나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는데 그 사용액이 전혀 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차관님, 2024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조기 정산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6586억 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무려 2400억 원 이상이 조기 정산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6.5%입니다.

또 하나 여쭙볼게요.

그러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12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확인한 것보다 좀 더 많네요. 제가 확인한 것은 996억 원인데요 대략 14.5%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기 정산된 것과 불용처리된 것만 합해도 50%가 넘어요. 그러면 예산의 목적이 실현된 걸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난방비도 절감 못 하고 냉방비도 절감 못 하고 지원도 받지 않고 수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원 대상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확인해서 앞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곽상언 위원 마찬가지로 취지에서 제가 중소기업부 한성숙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곽상언 위원 그 사업 중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는데요. 이 법률의 목적이 이래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이것이 입법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전기요금을 지원하려면 이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적절하게 선별했는지가 문제 될 것 같고 적절하게 선별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기요금을 지원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지원한 결과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감소했는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혹시 그런 평가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내용을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연 매출 3000만 원으로 초기 설정된 부분……

○곽상언 위원 그거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분류해서 평가를 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제가 확인한 바에는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마지막……

○곽상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현재는 집행이 몇 %가 됐느냐까지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집행률만 나타나 있지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그 효과가 어떤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지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곽상언 위원** 제가 아까 부총리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부의 모든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반영할 때만, 그것도 온전히 반영하고 제대로 실현할 때만 성과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 성과가 있는 건가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성과가 있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지원받은 분들의 숫자가 현재는……

○**곽상언 위원** 그건 제가 그다음 질문 드릴 거예요.

성과 있다고 볼 수 없지요.

자, 그러면 예산하고 결산은 맞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작년도 것만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이 사업은 2024년 2월에 처음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때 편성된 예산이 2520억 원입니다. 그 후에 약간 감액되었고요,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142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되지 않은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5.9%입니다. 전체 100%인데 5.9%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뭘지 아십니까? 혹시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제가 파악한 걸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초기에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곽상언 위원** 그 기준이 세 번 바뀌었고 정부가 주되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국민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저조한 부분의 이유가 사실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이 신청절차의 복잡성에 있다고 보입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신청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지요. 이게 지금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기부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매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허황된 얘기를 반복한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위원님 말씀……

○**곽상언 위원** 앞으로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만 있으면 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나만 더 제가 여쭙볼게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봐 봐요, 가정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요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이 미납한 전기요금을 모두 대납해 줍니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 상황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득 보겠습니까? 전기요금을 대납했으니까요.

한전은 전기요금을 판매하지요. 자기가 판매한 전기요금을, 전기판매대금을 소비주체가 아니라 정부가 대납한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득은 한전이 보는 겁니다. 한전이 수혜자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합니까?

또 하나 여쭙볼게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왜 자꾸 이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집행하지도 못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주장했던 거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곽상언 위원 실질적인 문제는 전기요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중기부장관님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도 보실 때 이 관점에서 좀 보시고 실제 집행률을 제고하시든 제도 폐지를 건의하시든 법률 폐지를 건의하시든 해야 우리 국민이 조금 더 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말씀하신 부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의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부총리님과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경제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정부는 이번 국정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발표했지요? 세입 확충 94조 원, 지출 절감 106조 원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경제부양에 대한 국민들 기대도 상당히 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제구조 개혁 로드맵으로 재정투자계획이 집행된다면 국가의 경제성장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까요? 예측치라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10조 투자계획을 제안한 거고요. 정부에서 아마 이걸 받아 가지고 각 부처에서 점검을 해서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성장.....

○이강일 위원 그러면 추계가 아직 안 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아직.....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의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감세, 사실은 이건 우리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그런 세금들을 감세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복지재정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망가진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재정투자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제구조 개혁을 담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민·중산층 지원과 세제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강일 위원 근로장려금 확대, 연금소득세 완화, 소상공인 간이과세 확대, 청년·신혼 부부 주거 세액공제 상향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시에 기업상속, 전략기술, K-문화, 지방이전 기업 등도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언론이 세제 개정안을 증세로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 정부에 반기업 이미지를 씌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지출 효과가 사실 굉장히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본 위원이 갖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번 조치가 증세가 아니다 그리고 회복과 정상화시키는 조치임을 선제적으로 국민께 명확히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하는 것 그리고 주식시장 종목당 투자금 10억에 대한 과세 부분, 이것 원래 이전 윤석열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합의를 무너뜨려서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조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제가 이 스토리를 잘 기억 못 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이번에는 과세 형평성 또 과세의 정상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이런 부분 증세가 아니고 분명히 세제를 원안으로 회복시킨 거다 이런 부분들과 제대로 된 세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나서서 설명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집행을 기재부가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세수추제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재부의 세수추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자동조정장치, 경기 대응형 세입구조, 외부 검증체계 도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출 절감 106조 원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니 이것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출 절감 과정에서 복지, 교육, 사회안전망 등 취약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금융위원장님께 가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320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코스피 5000 목표 설정하고 주주 친화적인 상법 개정 등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 걸로 봐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강일 위원 특히 외국인 투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정부 출범 후 두 달간 외국인 순매수가 6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해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들에게 코스피 5000에 대한 정부 의지

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 코스피 5000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재팬 프리미엄 전략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2022년인 것 같아요. 이럴 당시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라고 해 가지고 주요하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제가 첫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본형 ISA인 NISA 이걸 통해서 투자금 비과세를 확대해서 국내 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 데 효과를 봤고요. 둘째는 자사주 매입, 배당률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 가치 극대화를 추진해서 글로벌 펀드의 투자를 유인해 냈습니다. 셋째는 PBR이 1 미만인 기업퇴출제도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서 기관투자 활성화하고 정책금융을 연계한 인센티브 해서 기업들의 참여도 상당히 독려해서 성공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 5000를 위해서도 한국도 유사하게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될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첫째는 한국형 PBR 공시제도를 도입하자입니다. 일본처럼 PBR 1 미만 기업에 대한 상폐,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입니다. 일본을 예를 들었으니까 일본은 금융청, 거래소, 기관투자자가 연계한 계정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 논의가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밸류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일본도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IR 활동 이런 것 장려했거든요. 한국도 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이상의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한국형 코스피 5000 전략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서 민관 합동본부, 어떤 특별단체,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듣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밸류업과 제도개선, 자율만에 맡겨서는 코스피 5000 도달 어렵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좀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 요즘 배달라이더들 산재 사망사고 계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올해도 벌써 열여섯 분 돌아가셨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된 분들이 전체 사고의 80%입니다. 무리한 배달 경쟁, 열악한 도로 환경, 부족한 보호장비, 불규칙한 근무가 겹쳐서 생명 위험 받는 겁니다.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지켜 줄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말입니다 전체 23만 대 중에서 9만 8000대, 약 40%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대행업체와 라이더 개인이 떠안은 구

조인데요. 쿠팡이츠라는 회사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은 원래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츠가 하니까 작년 7월부터 배달의민족도 의무가입을 없애서 선택가입으로 바꿔 버린 겁니다. 이제는 보험 없이도 누구나 다 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안전망이 붕괴된 것이거든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의무화가 시행되면 가입자가 늘어나서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고 안정될 겁니다. 보험료 부담 줄이고 플랫폼 책임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토부장관님, 플랫폼과 협력해서 무리한 배차와 속도 경쟁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의지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배달앱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안전을 해치지 않는지 위험성 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실질적인 안전대책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저희가 금방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고용부 등과 협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배달앱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가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속도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 대화기구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정부기관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런 부분도 같이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배달라이더는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라는 것 강조하셨고 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교통·물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이번에는 정말 분명한 대책과 실행 의지 꼭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잘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사실이고 또 부총리님이 결심하시면 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아직 결정을 안 하셨어요. 너무 늦지 않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늦지 않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늦지 않는 게 언제인지 너무 궁금해서요. 언제쯤일까요? 귀국하시면 결정하실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대통령님 귀국 문제보다는 제가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와 있고 이래 가지고 더……

○조은희 위원 예결위 끝나면 하실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빨리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너무 늦지 않게’에서 ‘빨리’가 조금 진전된 걸까요? 좀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삼 일 내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제가 단정하기 어렵고요.

○조은희 위원 일주일 내로요? 일주일엔 넘게 걸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만 괴롭히겠습니다.

김영훈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조은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현재 포스코이앤씨 집중 감독이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이앤씨 전국에 103곳, DL이앤씨 44곳 사업장이 모두 무기한 중단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공사 중단했다고 하시고 작업 중지로 인해서 다른 일용노동자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챙기고 있다고 어제 말씀하시던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포스코에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노동자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저희 지역구인 서초구만 봐도요 반포21차·신반포18차·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올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주계획을 세우던 주민들로서는 입주 지연이 현실화되면 전세 만기와 이사 계획 등 주거비 또 추가비용 피해가 발생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반포21차는 공정률 92%로 중단되었고요, 내년 6월 입주 앞둔 신반포18차는 공정률 67%로 멈췄습니다. DL이앤씨가 추진하는 방배삼익아파트는 공정률 30%에서 중단됐습니다.

장관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건축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게 되지요. 최근 방배15구역도 시공사를 포스코이앤씨로 정해 놓고 이걸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고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추가비용 부담, 노동자 얘기를 어제 하셨는데요 추가비용 부담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안전하게 아파트를 짓는 것이 종국으로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 피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조은희 위원** 공사비 상승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이게 주민들께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전이라고 그렸는데 재건축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올 스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인데 장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광주 그때 현대산업개발도 봤듯이 무리한 공기단축이 또 안전사고로……

○**조은희 위원** 그건 광주 얘기이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공사 중단된 그 현장의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 피해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계세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중단해야 되느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장관님이 안 나와 계시고 차관님이 나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조은희 위원**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적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또 망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상승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래서 9월 초에 발표하신다는 건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대충 짐작도 가는데.

제가 오늘 여쭙보려는 거는 공시지가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공시지가를 인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분명히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성과와 한계,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현실화 계획을 했는데 그게 성과와 한계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 하고 관계부처하고도 논의해서 내년도 공시지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연말에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부동산정책 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면 세금을 고치는 거를 우회해서 결국은 세금

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공시지가가 현재 69%인데 90%로 올리고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인데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80%로 올린다, 이러면 더블 세금폭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제가 또 여쭙보고 싶은 거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이 내년 5월이거든요. 그 유예를 연장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스톱할 거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보유세 이만큼 늘리고 양도세 중과세 유예도 없애서 양도세도 이만큼 늘리면 공급대책을 발표하시더라도, 공급대책은 3기 신도시 하더라도 금 나와라 뚝딱…… 김현미 장관이 그러셨잖아요, 빵이라면 막 만들어 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정부 때까지 이어 오면서 10년이 지나도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이 돼야지 입주가 될지……

그러니까 현재 매물이 유동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보유세 올리고,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데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이러면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흐름을 보면 공시가를 문재인 정부 때로 돌리려는 그런 게, 시장에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야지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어떤 취지이신지 충분히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정책 반영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환경부장관님한테 드릴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정상적인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 저는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신데 당시 한정애 장관이 환경부장관인 시절 21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지만 못 하셨지요? 폭탄 돌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5년까지 다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21년이 골든타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장관에서 또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이렇게 오면서 쭉 보시면 장관님들이 전부 우리 김성환 장관님한테 지금 폭탄을 돌려놨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장관님도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이 폭탄을 또 돌릴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이 문제는 환경부의 책임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와 인천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책임져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에 직매립 금지가 시행이 되는데 현재 한 50만t 정도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 조만간 3개 시도지사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숙의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장관님은 폭탄 돌리기 하시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을의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그리고 산자부·과기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그래서 그때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치를 내놓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1%에도 미치지 못하느냐라는 상당한 실망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경제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도 전망치 0.9%인데 저는 상당 부분 이 성장을, 정부 지출 그리고 정부 지출의 영향을 받는 민간 소비에 의해서 지금 이나마 성장이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두 차례 추경을 지금 우리가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출 규모만 따지면 두 차례 합치면 한 30조 됩니다. 이 추경이 우리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효과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이 효과가 금년도에는 한 0.1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0.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1·2차 추경 효과를 합치면 한 0.2%p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정도 재정 부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0.2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0.7%인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내수를 비롯한 수출, 우리 민간의 성장 역량이 0.7% 이하가 되는 그야말로 바닥 수준에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상반기의 성장률이 0.2%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많이 낮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게 아마 작년부터 해서 계엄의 여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장의 장기화를 그동안 방치를 해 온 겁니다. 소극적인 정책 대응이 한몫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 효과를 논하지 않습니까? 이 추경은 그야말로 타이밍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빨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굴러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커지는 거지요.

작년 초부터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 추경을 하려면 빨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30조 추경을 1/4분기에 했다고 하면 추경 성장 효과는 아마 배가가 됐을 겁니다. 당시에 0.4%p로 봤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 효과도 절반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1차 해서 한 0.1 그다음에 2차 해서 0.1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 30조를 당겨서 했더라면 효과는 더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여기에서 정책 실기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산자부 문신학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차관님, 98 28이라는 숫자를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들어 봤습니다.

○**안도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전력 수요는 98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송전설비는 28 정도로밖에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겹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도걸 위원** 예, 정확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병목현상을 빨리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일명 한반도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이것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삼 년 당긴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것을 다 하는 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한 50조 정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73조 정도, 그렇지요? 다른 숫자까지 포함해서 73조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현장에서 신속히 진행시키느냐가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관님을 비롯해서 지금 전방위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의 건설 역량을 좀 확보하자는 거지요. 먼저 첫 번째 이유가 지금 한전이 투자 역량이 매우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지금 200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3조 이것을 다 감당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자본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또 민간의 어떤 건설 역량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이 나름대로 활력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민간의 건설 역량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우리 부총리께서 이번에…… 성장전략에서도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법 개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불필요한 민영화 논란을 없애야 돼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민간의 건설 역량뿐이지 그 운영은 한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손대지 않으면서 민간의 어떤 투자와 건설 역량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산업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산업부가 정기국회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도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십시오.

다음에 과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가AI컴퓨팅센터 매우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차례나 유찰이 되었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투자 리스크가 좀 크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치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민간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분구조도 개선을 하고 매수청구권 같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민관이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민관이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마 유찰은 계속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투자 조건을, 유치 조건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검토하고 이 사항은 이제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으로 올라갈 겁니다.

○안도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경을 전제로 해서 재입찰이 언제쯤 공고가 될 예정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시기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9월 초·중순에 전략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저희가 바로 의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입지 선정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리고 이것 정책적인 고려를 분명히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기존에 공공, 국가AI 데이터센터 또 실증 장비를 가지고 있는 실증센터 그리고 AI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는 곳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에 대해서 좀 우선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저비용으로 고성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의 성장 거점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번에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광주가 지금 AI 국가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컴퓨팅센터는 수도권은 이제 제한을 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 고려하고 있고, 지금 AX 과제 선정된 지역 중심으로 충분히 좀 고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신중하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안도결 위원 그렇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강력한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단순 지급결제수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에 뒤처지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전 세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달러 베이스가 지금 99%를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칫 놔두게 되면 통화주권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나름의 어떤 사용처와 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우리 통화는 전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통화 시대가 개막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또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결 위원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출해 왔는데요. 금융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법안을 제출하겠다 했거든요.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쯤 제출하실 생각이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정부 내부의 논의를 좀 거쳐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정기국회 내에서 국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 입장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께서 주무부처이겠지만 이체가 가지고 있는 외환과 또 통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님께서 경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수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윤후덕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 윤후덕 위원입니다.

기재부장관님하고 2차관님께 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워낙 유명한 사진이지요. 이게 R&D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여기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R&D 예산 심의에서 2023년 대비 2024년 감액된 계속과제 복원을 위한 증액 요구 사업은 불가하다고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이걸 왜 불가했어요?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4조 6000억이 감액됐어요. 그러면서 한 2만 5000개 사업 그리고 313개 사업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반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해서 그전에, 2024년에 감액 조정하고 중단시킨 사업들을 복원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예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처에서. 왜 그랬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요 그때 주로 감액한 게 소규모 R&D 사업을 많이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가 한 3000개 정도가 감소되었는데요.

저희들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는 R&D 성과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 사업은 없애고 신규 과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 사업설계도 신사업……

○윤후덕 위원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나중에 정정해서 다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2차관이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도 같은 취지로 예산 반영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목소리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윤후덕 위원 당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R&D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한 2만 2000개 정도의 과제가 감액 조정됐고 313개 사업은 아예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도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4개의 과기원이라는, 그러니까 공공의 연구원에서 연구인력 950명이 방출돼 버렸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었어요.

제가 이것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R&D 예산을 무려 19개의 부·처·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만 개가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30조, 35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크든 작든 모든 연구과제는 협약을 하지요. 협약을 해야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협약서와 계약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를 만들면 이제

갑을 정부하고 연구재단하고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교수, 기업 아니면 연구자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날짜 그리고 기간이 있고 또 금액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뭐를 하면서 장비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5명 같이한다 또는 6명 같이 일을 한다 뭐 이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2년·3년·4년·5년 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된 거예요. 감액이 된 거예요. 30억짜리였는데 1년 차 지나서 2년 차 가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기업은 자기네가 해라. 왜 국가에서 돈을 주냐’ 그래서 기업들은 다 빼 버렸어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 변경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고. 그것은 이제 포기 계약서를 쓰게 되고 그러면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3억에서 1억이라도 받으려면 변경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 협약을 한 그런 연구과제 건을 부처별로 다 파악을 좀 해 주세요. 특히 예산처에서, 예산 당국에서 좀 해 주세요.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여기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또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부 그리고 모든 데서 이 R&D가 어떻게 어그러졌는지를 신임 장관님들께서 좀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2026년에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변경한 협약서를 가지고 다시 또 변경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원상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기재부에서 공문을 1년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공무원이 스스로 감액시키고 변경 협약을 강제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 행정행위를 하고 그걸 또 수정하려니까 도저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또 무리하게 만약에 감액이 돼서 장비 사용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봐서요……

○윤후덕 위원 아니, 살펴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당시 입찰할 때 그 상황을 좀 봅시다. 이 R&D 예산에 카르텔이 있다고 윤석열이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카르텔의 두목 이런 사람들이 발견됐어요? 수색이 됐어요?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선량한 과학기술연구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업은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 빼 버리고. 이것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감사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R&D의 삭감으로 인해서 큰 사태가 난 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이 다른 측면에서 R&D 감사를 한 적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한 적은 최근에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그런 차원에서 선의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최재해**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이 R&D 예산에 대해서 2024년 것을 감사원 감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방위의 요청으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진상조사TF가 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TF 통해서 조사된 내용들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역시 과기부에서 먼저 움직이셨군요.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변경 협약을 하면서 처음에 20억으로 계약을 3년 이렇게 했는데 그걸 10억이나 5억으로 줄여 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장비도 허술해지고, 내가 6명의 석사·박사하고 같이 일했는데 다 흩어져라 이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송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송한 사람들, 그것도 좀 파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송보다 더 큰 문제는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를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현상들, 이런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데 최선을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실제 그렇게 돼서 R&D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고자 한 연구진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틀렸다, 미국으로 가자, 중국으로 가자 그렇게 떠났어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 이렇게 일하려고 하신 분들이, 인력이 유출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 줘야 돼요.

하여튼 새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책임지시는 장관님들 그리고 또 청장님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잘 들여다봐 주시고 R&D 생태계를 복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아마 2024년도에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R&D 예산을 많이 깎아 보니까 신진 연구자라든지 또는 지방 연구자 이런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기부에서 또 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또 반영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저의 호소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3일째 수고 많으십니다.

산자부장관님이 안 계시나요?

문신학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정부 제1호 공약이 AI 세계 3대 강국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AI에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전기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지금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AI가 정말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원자력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만 있어요. 그리고 2차 추경예산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1180억, 그런데 원자력 관련 예산은 없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를 분석을 한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분석한 것이고 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보니까 지금 저 오른쪽의 732는 데이터센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이 1GW가 한 53대 정도 발전소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도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세요.

구인난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는데요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구전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AI 첨단기술을 연구하는데 국내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 전력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보니까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사실 좀 간헐적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이게 스테디하게 전력이 공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AI 강국 하겠다고 외치면서 전력 생산 계획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다음에 좀……

다음 슬라이드 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외국계 회사들도 보니까 벌써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력 발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지금 원전에 대한 사안이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안은 전력에 대한 전원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같이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AI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전력 수요의 증분까지를 고려해서 원전과 신재생의 조화로운 확대를 같이 고려해서 전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그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신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한테만 역점을 두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전력수요가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 좀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전해 듣기로는 자꾸 부처를 신설하고 재편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후에너지부. 그런데 지금 보면 기후는 환경 쪽이고 에너지부는 산업 쪽인데 환경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에너지 이런 산업 부분은 진흥, 육성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은 한 부처에 있으면 좀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기후에너지부로 간다거나 아니면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확실하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정확한 방향이나 방침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았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통합을 했다가 에너지 위기가 오니까 이것을 기후부하고 에너지하고 분리했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이원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에너지정책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 강국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포션을 좀 늘려서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환경부나 이런 부처 문제를 생각해서 규제를 하는 환경부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부장관님이 안 오시고 이스란 차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장관입니다.

○**조배숙 위원** 오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상임위가 끝났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시구나.

지금 낙태죄 때문에, 사실 이게 현재에서 한정위헌 판결이 났는데요. 2020년도까지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못 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공백 상태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것은 국회의 잘못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책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백 상태가 돼 가지고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이에요.

지난번,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임신 36주 차인데 낙태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본인이 자랑스럽게 올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알아보니까 병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살인죄라고……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527명을 소개받고 527명을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찰에 진정서 내셨지요.

그런데 낙태가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기 임신 10주 차 태아 초음파 사진입니다. 임신 6주 차가 되면 심장이 뛰어요.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10주 차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8월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이것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7월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무제한 낙태 허용하고 나아가서 낙태 수술·약물에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임신 초기 자기결정권 보장과 태아 생명권의 균형 있는 입법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이런 아이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낙태 약물 도입하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 허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 그리고 현재 낙태 약물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물도 없고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도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피임 수술도 비급여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본인 부담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재정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이 국정 5개년 계획에 보건복지부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이것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국정과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9월 중에 아마 확정돼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 불합치 이후에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로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안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도 그래요. 어떤 임신 주수나 산모의 건강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약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태아도 생명이거든요. 사실 여기 앉으신 분들 다들 태아이셨어요.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탄 생각 먹었으면 여기 이 세상에 안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이게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해서 국정운영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법 공백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형법 개정을 해야 되고 그것과 동반해서 모자보건법에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뤄야 돼서 두 가지 법에 대한 개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물 관련해서는 현재는 허가된 약물이 없기는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허가를 받은 약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WHO에서도 주수를 가려서 권고하는 그런 안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관리에 대한 것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미소지던가요? 뭐 그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미프진’이라는 약물이……

○조배숙 위원 그게 지금 미국에서 허가를 해 줬는데 실제로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모든 약물은 안전성·유효성을……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어떤 확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도를 넘은 것 같다 이래서 상당히 조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도 같이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약품에 대해서는, 약품이든 임신중절 시술이든 다 여성 건강에도 또 약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약품도 결국은 임신중단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법에 보면 반드시 수술만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배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으므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촉박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조속히 심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대기석에서 미리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지금 문화예술·관광·영화 분야 3대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5년 1110억 원에서 2024년 552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영화발전기금은 같은 기간에 2271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사실상 고갈 직전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역시 2019년 4717억 원에서 3213억 원으로 1500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재원이 불안해졌기 때문인데요. 법정부담금이 폐지되거나 경기둔화의 여파로 관련 산업에 부가되는 부과금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기금 확충 전략이나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영발기금의 재원이었던 부과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기금 부족의 여파로 현장에서는 이미 지원 중단과 축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인과 영화계는 내년을 불안해하면서 창작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관님, 혹시 기금 재원 대안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기금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 가지고요 또 중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일반회계, 체육기금 또는 복권기금에서 전입을 시켜서라도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이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을 한 가지 또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법원은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형과 7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장관님, 저작권을 침해한 해당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실제로 피해를 본 당해 산업과 창작 영역의 재원으로 삼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많지 않다고 또 제가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미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환수된 범죄수익을 단순히 국고에 넣지 않고 피해자 보상, 사회적 회복, 공공 목적으로 재투입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환수된 범죄수익이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따라서 전액 일반회계로만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PPT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은 2023~2024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1260억 원을 보전했고요.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부 강화로 2024년 한 해 1526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관광기금의 재원이 되는 합법 도박시장을 침해한 그러한 환수 범죄수익들입니다.

웹툰·영상 불법 유통도 아주 심각합니다. 2023년 웹툰산업 피해만 4465억 원입니다. 단속해서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면 문예기금이나 영발기금의 재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기재부가 법무부·문체부, 사감위, 경찰청과 함께 범죄수익 귀속 TF를 구성할 의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은 범죄수익 전체의 별과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재원 위원** 아닙니다. 해당 범죄, 저작권침해면 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부나 또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규모가 또 너무 작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만일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력 의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창작 생태계와 우리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어 줄 기금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수익을 전액 일반회계에만 귀속시키는 방식은 피해 회복이 없는 환수, 단순한 국고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부처의 실질적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방통위원장님, 2024년 결산 자료를 심의해 봤습니다. 방통위가 총 5억 5900만 원가량을 소송비용에 사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이 부족해지니까 관용차 유류비까지 전용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의 2배를 넘겨서라도 꼭 이 소송들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송 패배가 되고요.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을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소송비가 0원으로 됐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부 위원회 중에서, 부처 중에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국내 소송뿐만 아니라 글로벌테크 등과의 소송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더라도 소송비가 하루바삐 복구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김재원 위원** 방통위는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닙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청부 민원을 자행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무리한 방송 제재가 있었고요. 결국은 소송이 발생을 하자 국민 세금으로 정치 방어를 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PPT 또 주시지요.

24년에 방송심의 소송 건수 30건 모두가 23년 9월 취임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의결한 사안들에 대해서입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들에 대한 무리한 제재였습니다. 당연히 불복한 방송사가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겠지요. 현재 1심 판결이 된 15건만 보더라도 모두 방송사에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견된 패소에 방통위가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정치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치 방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견된 패소는 아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심의 기구입니다. 심의와 관련해서는 신고나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독립된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왜 그러면 모든 건이 다 이렇게 패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15건이 패소를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방통위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왜 소송비를 삭감을 했느냐? 제재 남발과 소송 그리고 패소의 악순환을 제발 멈춰라 하는 의미로 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더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방통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외상 계약까지 하셨지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 소송대리 계약이 총 11건인데요, 계약액이 5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모두 미지급했어요. 외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소송 예산도 없는데 패소한 재판의 항소를 왜 거듭하는 것입니까? 개인 의지십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 정치 방어를 이어 가겠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송 해태가 되고 처분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저희가 반드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결위원장님, 24년 예산의 과도한 전용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한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의 거듭된 지적과 예산 삭감의 취지를 벗어난 외상 계약 조치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4년에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이 약 5200억인데요, 사실상 국가유산청 사업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사업이고요, 매년 3000건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신청으로 방대하게 규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 문제는 국회 예산심의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총액 계상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는 예외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시관 리모델링, 수장고 건립 등은 국가유산청 본래 목적사업이지 예외적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전시관 개보수를 비롯해서 각종 건립·신축 사업 등은 사전 계획 수립과 예측이 비교적 가능하고요, 2020년도부터는 매년 300억 원에서 1230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10~30%에 해당하는 예산인데요, 해마다 총액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덮어놓고 총액으로만 편성 집행돼 왔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또 있는데 본래 사업 취지와 성격이 다른 사업까지 함께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의 직접적인 복원이나 수리가 아닌 기록화 및 연구, 관람, 편의시설 정비 등은 유산 보수정비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당초 목적 외 사업까지 포함돼서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검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급 복구를 비롯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총액사업으로 유지를 하고 관행화된 예측 가능한 사업은 총액사업에서 분리편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 국회 결산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온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사업 및 예산편성 방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 총액사업으로부터 분리편성해서 항목을 정확히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국가유산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넣어 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조금씩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케이스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제가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회의 예산심의권 보장과 예산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반드시 사업예산 분리편성에 대한 제도적 방안 협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예결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입니다.

예결위 질의에 앞서서 현재 회의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좀 호소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냥 일반 국회도 아니고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냈던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날 12월 3일 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이 여전히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계엄을 찬성하는 인사를 뽐뽐하게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저희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계엄을 찬성하고 내란을 찬성했던 그런 인물을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 버젓이 들여와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결위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왔지만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든 부결이든 찬반이라도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107석이나 됩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 배지가 아깝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국민의 세금 아깝지 않습니까? 계엄에 찬동한 인물을 그러면 저희가 다 용서해야 합니까? 여야가 합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견들 다 받아들이면 국민들께서 ‘옳다구나. 잘했다. 국회가 이제 협치하는구나. 정상이 됐구나’ 하는 겁니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전원 다 배지 떼십시오. 세금을 받을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혹은 부결을 던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안 멈춰지나요?

감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장님에 대한 탄핵 기각이 25년 3월에 있으셨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고민정 위원** 그 당시의 입장을 보니까 표적감사와 부실감사의 억측이 현재 결정으로 불식됐다라고 입장을 내셨더군요. 맞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고민정 위원**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부실감사는 없었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저희들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3월 13일 이후에 많은 녹취록들이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 보셨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쪽 질의를 드릴 테지만 그 에 앞서 감사원장님께서 탄핵이 기각되기 직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해서 입장을 새롭게 내시거나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저도 나름대로 직원들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시다만 지금 재판부에서 나오는 거는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녹취록이고요.

○**고민정 위원** 예, 직원들 간의 녹취록이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고민정 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원장으로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이미 고발당하신 것도 있으시지요? 법적책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감사원장으로서 국민들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하는 정도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직원들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고민정 위원** 원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 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사과를 드리거나 할 의향은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사과할 의향은 없다.

제가 PPT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보도로 많이들 보셨겠지만 ‘벌써 7개월째다. 힘들어 죽겠다. 계속 쫓아대니 심리적으로 힘들다. 지금 조사 들어가면 새벽 3~4시에 집에 보내 준다. 통계 조작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한다.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 준다’, 들으셨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고민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녹취록을 보셨을 때?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은 통계수치가 임의로 조정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저 부동산원 직원은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 준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건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망상입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저건 받아들이는 쪽에서 저렇게 판단한 거고요.

○**고민정 위원** 다음 거 보여 주시지요.

‘국토부가 주택가격 통갯값을 하향뿐 아니라 상향 검토 쪽으로도 얘기 많이 했다고 하면 감사관은 그걸 지운다. 올린 건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한다’, 통계 조작이 아니라 이 정도면 진술 조작 아닙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게 안 했더라도 받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아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진술 조작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제가 보여 드렸던 저 녹취록들은 23년 3월 9일, 3월 27일에 통화한 내용 혹은 녹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3월 28일에 결국에는 그 중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 조작이 맞다. 국토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그랬다’. 결국은 감사원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받아 내셨군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십니다.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다음 거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때릴 거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거다. 최소한 국토부라도 엮일 수 있는 걸 내야 한다. 감사원이 하고 싶은 건 청와대까지 연결해서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것일 것 같다’, 왜 저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 사정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고요. 하여간 저희들은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정해 놓고 하였던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런 것이 바로 조작이라는 거지요. 저기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올린 건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더라.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 준다’. 결국은 이분 조작이라고 말하고 나서 해결이 됐겠지요. 이 사람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녹취가 된 겁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즉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심경을 얘기한 글이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맞지요? 누군가가 써준 글을 읽은 건 아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녹취록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하여간 재판부에서 그런 모

든 것을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도대체 감사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감사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는 그 순간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를 충실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표를 여전히 남겨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수많은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얼마나 감사원이 심각하게 이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는지가 여기에 이렇게 버젓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의 최고 수장이었던 분께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사과할 의향 없다. 우리 직원들은 아무 잘못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하여간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최선을 다해서 진술 조작을 하셨겠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다음 것 보여 드릴게요.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고민정 위원** 형법 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고민정 위원** 지금 이 모든 정황들이 제가 보기에는 협박 혹은 강요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동의 안 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제가 보고받은 것하고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정 위원** 보고를 잘못 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감사원장 최재해**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징이 될 거고요,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고민정 위원** 해당 직원에 대해서 확인하셨군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고민정 위원** 일이 있었는지……

○**감사원장 최재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재판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직원들은 저희들이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충실하게, 강요한 적 없고 있는 그대로 계속 절차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해당 직원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는 최소한, 이곳에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 등을 받으면서 이곳에 있는 이유는 국민들 앞에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다들 ‘장’ 자 자리

를 달고 있는 겁니다.

‘원장으로서 감사원 직원들이 무리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를 했든 혹은 진술을 조작당하는 사람이 있었든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감사원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국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그러고서는 정말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결국 원장님께서서는 해당 직원을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각오하고 계시겠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경제부총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ODA라고 하지요? 이 사업은 투명성하고 공공성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동의합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편성을 했던 캄보디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보통 민간협력전대차관, 우리가 PSL(Private Sector Two-Step Loan)이라고 하지요? 이게 수혜국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민간지원 방식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ODA는 국가와 국가 간의 업무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해 보자 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은행,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협력을 하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김용만 위원** 우리 은행이 아니고 현지 은행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현지에 있는 우리 금융기관들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PSL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기업이 실제 수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알 수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용만 위원** 맞습니다. 누구에게 이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올해 3월에 국회사무처에서도 연구용역보고서를 이렇게 냅니다. ‘PSL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특혜가 우려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사업 방식으로 PSL을 선택하면 그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부활을 합니다. 사실 PSL이라는 방식을 많이 쓰지 않았습시다. 35년 동안 단 한 건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쓰지 않았던 방식을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이게 참 우연치고는 좀 절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캄보디아에 지원하기 위해서 648억 원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하필이면 캄보디아에만 이 PSL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결정된 배경이 있을 건데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어디서 정확하게 누가 제안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김용만 위원** 좋은 방식은 아니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얘기가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김용만 위원** 맞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집행이 되기 전에 이 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김용만 위원** 캄보디아의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할 하고 그런데 방식을 꼭 PSL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민관 협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아무튼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께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 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바로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건데요. 이 도이치파이낸셜이 23년, 2년 전에 캄보디아 금융회사 BAMC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금융기관을 직접 도이치파이낸셜이 지배를 하게 된 건데.

도이치모터스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입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고 그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을 통해서 차량 할부나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사인데 말인즉슨 해외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만한 그런 사업구조가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돌연 23년에 캄보디아 금융회사를 인수한 거지요. 그러니까 도이치그룹 계열에서는 첫 해외 진출이자 계열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국내 수입차 판매에 집중을 하는 곳이 왜 캄보디아 금융사를 갑자기 인수했을까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회사 차원의 결정이라 그 정확한 배경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할부금융을 하는 회사고 인수한 회사도 할부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높았던 회사니까 해외 진출 차원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금융위원장님, 수협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 갖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현재 수협회장이 노동진 회장인데, 수협은행이 도이치파이낸셜에 대출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한 오륙백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까 제가 소개했던 648억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캄보디아 PSL 규모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이게 우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연이지만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또 이 대출이 4%대 최저금리여서 금융권에서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노동진 수협회장이 선거법 그다음에 성접대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협은행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가진 위원장님 입장으로서 이런 정황들을 고려할 때 이게 과연 단순 우연일지 아니면 윤석열 정권과 연관된 특혜 결과가 아닌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게 수협중앙회장 건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나가 있는 대출의 조건이라든지 상황으로 봐서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위규 상황으로까지는 안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다만 금감원에서 필요하면 조금 더 들여다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부총리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캄보디아 PSL 건으로 좀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 한도 자체도 크게 상향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에 캄보디아 저금리·장기대출자금, EDCF 차관 한도가 어저께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치면 9800억 원이었던 게 4조 1900억 원으로 늘어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님 기재부에 오랫동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용만 위원** 보통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차관 한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금 이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보통은 5년 단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데 이것은 2년 단위에 두 번이나 그것도 총 4배 인상을 합니다. 이게 좀 석연치 않지요. 그런데 캄보디아 쪽으로 한도를 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국내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표 후보 사업 중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0억 원 되는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병원 2차 건립 사업을 발표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용만 위원** 이게 2개 단계 사업인데 지난 1단계 사업에서 업체 회림이라는 곳이 있지요. 참여를 합니다. 1차 사업에서 회림이 건설사업 관리하고 설계로 참여를 해서 2차 확장 사업 역시 연속해서 수혜를 받을, 연속해서 수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혹

시 실제로 회림이 참여를 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실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 보면 대학병원 건립사업이라고 2022년 10월부터 25년 5월까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회림이라는 회사도 좀 석연찮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설계랑 감리 수의계약 수주했고 관저 2차 증축 설계 수주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수많은 수의계약 특혜까지 받은 곳이고 김건희 씨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후원도 하고, 요새 많이 나오는 건진법사 라인으로 알려진 재단에 기부도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ODA 한도 증액이 실제 민간업체 회림을 특정해 가지고 한마디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나오는 건데요.

또 있습니다. 건진법사와 통일교 전 본부장 간의 대화에서 ‘큰 그림을 함께 만들자. 다녀와서 회림 대표를 같이 만나자’ 이런 얘기들을, 연락을 주고 받은 게 보도에 나옵니다. 통일교가 정부 ODA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특정 기업을 연결을 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 때문에 특검 조사를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도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용만 위원 통일교에서 추진해 온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콩 평화공원 프로젝트. 이게 ODA를 통해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기재부에 했어요, 차관 지원계획 한도 증액 당시의 회의록 그다음에 캄보디아 채원 배정 사유 같은 것들. 그런데 몇 번씩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기재부가 안 줍니다. 이것을 왜 안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만 위원 이거 자료가 꼭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일들은 다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와는 다른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반드시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달고 추진을 하는 해외 원조 사업들은 당연히 더 투명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다르다는 모습을 부총리님께서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셔서 가지고 필히 의원실로 피드백 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해외 ODA를 하면서 투명성, 그리고 이게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할 부분은 또 사전적으로 사업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서 특검에 맡길 것은 맡기되 선제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은 밝

허내는 모습이 더 모범적일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 감정평가 의무화로 인해 주택감정 가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전세반환보증 가능 금액도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주택금융공사도 주택공시가격 126% 초과 시 보증이 거절되는 정책을 바로 내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이틀 전 예결위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고 위험성에 대해 국토부장관님과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했고 보완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관련해서 국토부와 금융위는 본 의원실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보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노동자에게 근로조건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한 누구나 마음 편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특히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푸른씨앗이라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입니다.

장관님, 뒤의 PPT 화면 잠깐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화면에 나온 숫자들이 혹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상상해 본다면 수익률같이……

○박민규 위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첫 번째 2.07, 2005년도 이때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간 평균 수익률입니다. 처참하지요. 두 번째 6.82는 198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82입니다. 세 번째 6.52는 근로복지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24년도 수익률이고 푸른씨앗의 23년 수익률은 6.97, 올 상반기 수익률을 환산하니깐 연 7.46까지 됩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박민규 위원 제가 미국의 대표 기금형 퇴직연금 401k의 20년,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AI가 8.6%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화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장관님, 연간 600만 원씩 퇴직연금을 납입할 경우 수익률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액을 비교한 겁니다. 연간 600만 원의 퇴직연금을 납입하려면 만약 월급이 36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 쯤만 불입하면 가능한 금액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도 환급받으니 사실상 월 20만 원이 아닌 월 16만 7000원만 내면 되는 거지요. 미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기금수익률 6.8 정도만 되어도 평범한 노동자가 노후에 10억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2.07짜리 수익률의 퇴직연금에 노후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2005년도에 도입됐으니 벌써 20년인데 그동안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그나마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조차—푸른씨앗이지요—2022년 10월에 만들어졌고 그것조차도 30인 이하의 작은 회사만 가입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도 논의 중이지만 일단 현재 운용 중인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문호를 전면 확대해서 노동자나 자영업자, 공무원 등 일하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 빈곤율을 생각할 때 퇴직연금 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민규 위원** 현행 푸른씨앗은 소규모 기업,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 특히 4년 동안 10%씩 추가 입금 및 운용 수수료를 면제라는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혜택 기간 이후에도 가입자의 기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율은 무려 0.1, 시중에 있는 민간 퇴직연금에 비하여 매우 낮습니다. 즉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는 현재의 규제를 풀어 놓으면 기금의 규모도 늘고 또 규모의 경제도 가능해집니다. 수익률 제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세사업체의 운영자나 노동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현재 국회에는, 푸른씨앗 가입 대상의 문호를 확대하고 자유롭게 IRP 개설도 가능하게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님이신 한정애 의원님과 예결위원이신 안도걸 의원님도 푸른씨앗의 역할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50인 이하 사업장만 그리고 내후년에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당시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서 설립된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중소기업 아니더라도 누구나 기업은행 고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푸른씨앗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장관님의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확대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입자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로서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약으로 100인까지 일단 시행하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혹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나쁜 관행을 일삼고 있는 일부 노조와 은행권의 결탁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장관님은 지금 발언한 것 이상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매우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시는 것이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박민규 위원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등 공적기관이 운용하는 기금들은 꽤 괜찮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막상 그 혜택은 국민이 직접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형으로 과편화된 현재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지극히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거나 국민 개개인 각자가 펀드매니저가 되고 애널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각자도생을 강요받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확대는 일하는 국민 모두에게 우리 사회의 부의 증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달리 미래 세대의 부담에서도 자유로운 것이 바로 퇴직연금 개선입니다.

노동소득을 안정적인 연금자산으로 쌓아 가고 특히 부동산보다는 퇴직연금 등 주식시장 등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에 고용노동부장관님의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향후 본 위원에게도 관련된 제도나 그것이 확정되면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박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부는 국가 R&D 예산 올해 배분·조정안에서 고성능 GPU 지원과 분산 자원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즉 GPU 만들고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박민규 위원 우리 AI 시대를 대비한다고 해서…… 하지만 현실의 대학은 GPU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된 AI 연구를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장관님, 뒤에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저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진입니다.

서울공대는 폭염이 한창이었던 지난달에 AI 서버실에 전용 냉방설비도 없어서 선풍기와 가정용 에어컨으로 겨우 발열을 잡다가 결국 서버 전원을 강제로 셧다운했습니다. 대학원생 250여 명이 일주일 넘게 연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고가의 GPU가 있어도 발열을 감당할 냉각장비 인프라가 없으면 제대로 활용 못 하는 현실입니다.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모아서 설비를 마련한다고 해도 연구비 집행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냉각설비 살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서울대조차도 이렇게 GPU 냉각설비를 살 돈이 없고 서버를 선풍기로 식혀야 되는 이런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선 방안이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행 규정상은 연구비에서 냉각설비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규정을 좀 변경해서 냉각설비 장비를 각 대학들도 구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민규 위원 지방소멸 시대에, 본 위원이 이틀 전에 지적했듯이 지방거점국립대는 서울대학교가 받고 있는 지원의 반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서울대학교조차도 저렇게 부족한 AI 인프라는 조속히 신속하게 과기부의 예산 규정

변경으로서 확보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하고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검토해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GPU 전체 규모에서 H100 기준으로 약 2000대 규모가 학계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정되는 GPU들이 다 GPU 애저(Azure) 서비스,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계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GPU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냉각설비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하고 정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을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한성숙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이라고 해서 결산에 관련된 질의만 드리는 건 아닌데요. 가능한 한 결산 관련된 의견을 좀 여쭙보겠습니다.

모태펀드는 중기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처가 같이 출자를 하는데 중기부는 2024년도 예산 보니까 4500억 출자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다 집행이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중소기업 쪽 펀드 부분이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4500억은 전부 다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데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중기부에서는 4500억을 다 집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뒷단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태펀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중기부라든지 출자기관이 모펀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모태펀드가 출자한 모태출자펀드—자펀드라고 하지요—여기에 민간투자자랑 합쳐서 자펀드를 만들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벤처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모펀드까지는 조성되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산 서류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벤처기업들한테는 돈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알고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벤처투자펀드라고 저희가 부를 때는 두 가지입니다. 벤처투자조합도 있고 신기술사업 투자조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벤처투자조합만 관장하고 있는데 이 벤처투자조합의 최근 결성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고 있는데요.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겠지요.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한 40%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자펀드는 모태펀드도 출자하고 민간도 출자하는데요. 이 민간과 정부 출자의 비율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요즘 달라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민간 쪽에서 투자하는 비율이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투자가 줄어 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

부라도 투자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좋은 건데, 문제는 정부가 예전에 투자하면 ‘정부가 투자하니까 우리가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고 민간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민간은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볼 때는 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고 최종적으로 뭔가 자금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인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펀드까지 만들었는데 자펀드 자체는 결성 금액들을 다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지 이 통계도 갖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김한규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것만 1조 6000억이 투자가 안 됐습니다. 펀드 결성만 되고 투자를 안 했어요. 잔액 전체로 보면 한 3조, 작년 것만 1조인가 그래요. 물론 예비비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좋은 기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원래 투자자들도 캐피털 콜이 있을 때 투자하는 거지 항상 돈을 갖다 넣는 건 아니니까 대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좋은 벤처기업이 없다, 스타트업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하면 굳이 모태펀드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시장에서 투자자를 잘 찾지 못할 때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사업 부분에, 그런 산업에 도전하는 이런 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모태펀드의 목적인데 모태펀드가 그냥 우리는 딱 집행을 했으니까 그 뒷단은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장관님을 포함해서 중기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제 책임에 대해서 인식을 저하고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태펀드를 만드는 게 중기부의 책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서의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 다양한 원인이 있겠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현재 업계를 만나 보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들은 회수시장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소위 엑시트(exit). 투자를 했으면 자금을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 엑시트, 자금 회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현재는 상장을 통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상장보다 M&A 또는 새로운 펀드가 기존 투자한 회사를 인수해 가거나 이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50%가 IPO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PO가 쉽지도 않아요. 기술특례상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쉽지 않아서 최근에도 보면 한 다섯 건, IPO 연기한 기업 5개 중에 세 군데가 기술특례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이게 통과가 잘 안 돼요. 당연하지요. 수익이 잘 안 나는데 기술로 상장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조만간 수익이 날지, 한 3년 내에 수익이 나는 회사들만 상장을 시켜 주는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은 3년 내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엑시트가 안 된다고

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해결 방안이 됩니까? 중기부에서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물론 금융위하고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M&A 관련된 구주 매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지 지금 IPO…… 업계에서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워낙 회수시장으로서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많으신 상황이기는 하고요. 세컨더리 펀드 관련……

○김한규 위원 그러면 구주 매각의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특례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게 모태펀드 중에 구주를 매입하면 주목적 투자로 20%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의 특례 기한을 좀 연장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기업결합 신고를 했을 때 공정위의 승인 절차라든지.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사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 주는 사람들이 자금을 투자할 때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지주회사 규제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 방안에 AI라든지 디지털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환영은 하는데 문제는 장관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회수시장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다가 그런 세부적인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스타트업계에서는 이게 가장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 질문을 드린 김에 또 드리면요. 지식산업센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거든요. 이 부분의 작년도 예산이 637억인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김한규 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중기부 차원에서는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자체는 지금 28%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지자체 43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지자체별로 이유가 모두 다 다르고 지자체별로 예산이 좀 부족한 곳들도……

○김한규 위원 장관님, 벤처업계를 잘 아실 테니까 지식산업센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거기서……

○김한규 위원 저도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요즘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양주시 68%, 서울·수도권 부분은 이천시 70%, 이렇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도 공실률이 60%, 90%에 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기업들이 다 몰리니까 지역에다 지식산업센터를 만들면 기업들이 다 지방으로 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자체들이 다들 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요청하니까 쪽지예산으로 다 해 냈는데 문제는

수요분석을 하지 않고 예산만 주니까 집행을 못 하고 건축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44개소가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점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관련 내용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23년부터 균특회계 자율계정으로 변경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그리고 파악할 부분들은 지자체들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 어제 못다 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지방비가 7 대 3 비율로 매칭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부터 내년까지 매칭 형태로 일종의 과도기 사업이 진행되고 27년부터는 전면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21년까지 국비로만 지원하던 사업이 지방과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면서 그동안 이용 건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인천만 보더라도 2021년에는 6000건이 조금 안 됐는데 지난해 보니까 거의 두 배, 1만 건이 넘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이렇게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해야 할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요.

그런데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도 곳곳에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작년 2023년에 일부 시도에서 미지급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더 늘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8개 시도에서 미지급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 미지급 사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케 해 놓고, 그러면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도우미를 파견하겠지요. 그런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정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된 것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봤더니 다음 연도 예산이 들어오면 그걸로 메우는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시도에서 9월, 바로 다음 달부터는 미지급이 발생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부터는 지방이 전부 다 떠안아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이게 지방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의해서 이제 지방이 양사업으로 전환됐는데 현재는 국고가 행안부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을 활용해서 이것을 배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기존에 국고 했던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격차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해결한다 치더라도요, 문제는 지금 70%를 국가가 부담하는데도 저렇잖아요. 그러면 2027년부터 완전하게 지방으로 넘겼을 때 그때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정책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게 행안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이 41개가 공통으로 묶여서 예산이 내려가고 있어서요 아마 한꺼번에 27년 이후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랑 협의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지금 무슨 답을 듣는 건 아니고요. 장관님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셔서 관심 사업을 하나하나 챙기고 계실 텐데 혹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보스턴 코리아 연구사업 있지요, 과기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R&D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사업이 혹시 장관님의 관심 사업입니까?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된대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좀 더 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어떤 입장이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단은 국제협력 예산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있는 예산이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R&D 삭감 사태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김윤덕 장관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이상경 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노종면 위원** 철도지하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아직 꿈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지역에 지상철로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구민들이 여전히 반신반의하십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연말에 해당 노선, 사업 노선 구간이 발표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게 아시겠지만 수도권 철도지하화 마스터플랜 태스크포스가 25년 올해 3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경기도에서 제안한 경인선 전 구간 지하화 사업 타당성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연말에 말씀하신 대로 나오게 되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렇지요. 연말에 수립 예정, 발표라는 개념 자체를 수립 예정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같은 개념……

○**노종면 위원** 수립을 해 놓고 비공개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경인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전철 먼저 생겼던 전철 1호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인천시와 경기도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요청한 사업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서울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역곡이나 온수 구간 정도, 오류동 앞까지가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이외에는 서울시에서 요청한 데가 없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사업 대상 구간이 일부 있는데……

○**노종면 위원** 아닌 것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경인선 구간 이게 정확히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입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거기에 서울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 포함되어 있고 인천시도 포함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노종면 위원** 이 경인선 지하화는 대통령의 공약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노선 전체를 개발하다 보면 이게 재원의 문제인데 어느 지역은 개발이익이 많이 기대되는 데도 있고 어느 곳은 개발해도, 지하로 들어가도 이익이 좀 제한적인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해도 함께 추진하는 원칙 그리고 수익 노선의 초과수익을 교차해서 보전한다, 이 원칙 유효한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정한 구간의 노선 전체를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그래서 통합개발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압니다.

○**노종면 위원** 특정 역만 일부 시범이다 뭐다 해서 개발을 하면 그것은 안 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로라는 점은 지난번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고요.

지하화 대상, 특히 대심도 지하공사를 하는 GTX 같은 경우에 일부가 경인선 구간하고 교차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경우에 GTX 노선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선제적으로 있어야 비용의 추가 발생 등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계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철도 노선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약속이 아닌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 이 부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노종면 위원** 차관님께 다른 사안도 좀 더 여쭙보지요.

공사하다가 방치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서 미관상의 문제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범죄 또 안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이게 경기를 타서 그런 것인지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비슷한 개념으로 건축물 관리법상의 빈 건축물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노종면 위원** 이것은 공사가 완료됐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장사를 하다가 문을 닫거나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노종면 위원** 앞서 말씀드린 공사 중 방치되는 건물 사례는 수백 곳의 수준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빈 건축물은 국토부 파악으로도 2만 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실상의 방치 건물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사실상 방치된 건물로 그 지역에서는 흉물이에요. 그런데 극히 일부 공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공사 중 방치 건물이라든가 또는 빈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노종면 위원** 아니요, 사용 승인을 다 받고요. 정상적으로 극히 일부 구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실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하의 일부 구간이 변전소 등으로 활용된다거나,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상은 다 방치 건물이에요. 그런 경우 관련 법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지금 빈집법에 의해서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주 정밀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실제로 그 빈집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집계도 안 되고 있어요.

관련해서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께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한미 정상회담 정말 관심, 많이 지켜보셨는데요. 아무래도 핵심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아무래도 주무로 담당하고 계실 것 같은데 상당히 적지 않은 펀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아마 저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펀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여쭙볼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현재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총액은 미국과 합의된 것은 1500억 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0억 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은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간 논의된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사안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선 조달 측면에서는 저희 쪽에서 국책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론(loan)이나 보증 또는 필요시에는 지분 투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확정되지 않았더라는 거고요. 조달은 그러한 방식으로 조달이 되고.

이것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의 조선소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현대화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조선소 중에서 상당 부분을 미국의 해군이나 또는 미국 조선에 대한 MRO를 한다거나 또 우리 기자재 업체들이 가서 그쪽에 정착을 해서 운영이 된다거나 또는 인력 양성을 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망라되고 같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대부분이 무역보험공사나 이쪽 보증으로 상당 부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런 수출 보증이나 이쪽은 적자가 많이 누적이 돼서 더 이상 담보 여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출보험이나 이쪽을 통해서 펀드 조성 상당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좀 위험한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500달러, 한국 돈으로 208조 210조 가까이 되는 큰돈인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채 100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 3사를 다 합친 시총보다 더 많은 돈을 펀드로 조성한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우리 또 세금을 쓰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돈이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냥 허비되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전에 한진중공업이, 2006년인가요? 필리핀에 진출했다가 2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가 결국 철수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구성화돼 버리면 귀한 국민 세금만 낭비되고, 그 돈 액수가 너무나 큼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이 자칫 대한민국에서 지금 운영 중인 조선소의 물량들이나 아니면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현상이 돼 버리면 국가경제에 또 큰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기자재가 됐든 아니면 선박 건조가 됐든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니면 결국 미국에서 지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한국의 기자

재가 많이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그 펀드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 동의 절차를 구할 때 최소한의 국민 동의를 구할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 여기에 대한 고민 조금 더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우선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한 해에 1500억 불을, 한두 해에 만든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실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 프로젝트 간에 서로 논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캐피탈 콜 형식으로 그때 가서 그 프로젝트별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처럼 지금의 우리나라의 무역보험 한도라든지 또 선수금 RG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조선 3사의 생산 기반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숙련공들을 활용을 하면서도 미국과 어떻게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할 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서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이행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업은 고용이나 제조에 파생이 많은 산업입니다.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가 잘 기능해서 우리 조선 3사가 더 많은 수주를 하고 더 많은 선박 건조의 기회를 갖는다면 그건 좋은 일임이 분명한데 자칫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조선 생태계 또는 조선 고용 시장이 타격을 받아서 국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기획될 때 아무래도 우리 산업통상부장관께서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셔야 할 텐데 좀 구체화시킬 때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더 탄탄해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늘 염두에 두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울산 같은 경우는 관련된 염려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얘기도 좀 같이 귀담아들어 주시면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장관께서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희 산업부.

○**김상욱 위원** 그런데 보면 2024년 본예산이 2520억 책정되었는데 불용액이 1071억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여쭙볼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오전에 객상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의무지출 대상 사업인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그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우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를 쓸 거냐 하는 부분 쪽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이삼 년간 계속해서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제도상에 개선 사항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차분히 쳐다보고, 불용액이 아예 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의무지출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진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해수부장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삼면이 바다고 무역 국가다 보니까 무역항의 역할, 특히 무역항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안보가 잘 지켜지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지금 부산항·인천항·울산항에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중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배정된 예산이 거의 집행률이 11.2%밖에 되지 않고 실시설계만 완료되었을 뿐 공사 관련 계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상황과 앞으로 계획 조금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잘 알고 있고요. 인천항의 경우에는 8월 7일 날 얼마 전에 계약이 체결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부산·울산항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8월 말이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면 이게 계약 체결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최근에 드론 기술이 자고 일어나면 발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기술이다 보니까 지금 조달청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해 본 경험들이 사실상 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장관님들 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제가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로 오늘 9시 반경 사보임돼서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정은경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아프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책무라고 보입니다.

오랜 시간 상병수당 도입을 논의해 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 보

장을 위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상병수당 도입, 그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병수당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23년부터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본사업을 아직 진행 못 하는 게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범사업도 실행행률이 낮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의지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설계로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고 낮은 평가로 예산은 감액됐고 결국 2025년 전국 전면 도입은 연기됐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올해 예산은 36억 정도로 작년 146억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단순히 일부 시범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 토막 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됐는데요. 한국에 맞는 최적의 모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분석·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저희가 3단계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시범사업은 모형을 좀 달리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면서 적절한 모형을 찾고 있는 중이어서요. 시범사업 결과를 잘 분석해서 본사업을 기획해서 신속하게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상병수당 도입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 국민과의 약속을 이번에는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후보자 시절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민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저희가 2단계·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소득 기준도 소득 기준 없는 모형도 하고 있으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렇게 다양한 모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정책 효과 평가를 해서 세부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기획해서 본사업 도입 기획안을 지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안에도 포함이,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이 포함돼 있고 그런데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 논의, 기타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본사업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와 실패로 늦어진 만큼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7년 본사업 실시, 이제는 약속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국정과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어서요 아마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도입 시기도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안 규모도 지금 정해졌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거의 마지막 예산 협의 중인데요. 시범사업을 유지하는

예산과 사업을 기획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기획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은 제외되는 문제 또 소득 제한, 보전 금액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협약을 보면 상병수당은 보장 기간이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에서도 150일,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한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간, 급여 수준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저희가 직전 소득 60% 모형도 시범사업에서 적용하고 있어서요. 그런 다양한 소득 기준이나 인정해 주는 기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재원에 대한 추계를 같이하면서 적용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상병수당이 실제로 OECD 38개국 중에 한국·미국을 제외한 36개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늦었고.

아프면 쉴 권리는 유엔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입니다.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아직도 제대로 상병수당이 정착되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내실 있는 본사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또 보건복지부 관련……

질병관리청 청장님!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질병관리청장 나와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민과의 약속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제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아 HPV, 그러니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접종 대상이 12~17세 여성 그다음에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한정돼 있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일반적으로 HPV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남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인유두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HPV가 원인이며 약 3만 7800여 개의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HPV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국가예방접종 사업 안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공감합니다.

○박희승 위원 질병관리청은 2024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HPV 9가 백신 도입과 12세 남아·여아 확대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23년도에 저희 청에서 연구했던 결과인데요. 질병 부담이라든지 또 비용 효과성 등을 토대로 어떤 국가예방접종이 좀 더 우선순위인지를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우선순위로 도출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더 양질의 백신을 접

중하는 것, 국가백신에 대한 사안이고, 여섯 번째 우선순위로 도출된 것들이 남성 청소년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야 될 우리의 과제가 되었고 접종 대상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양질의 백신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접종 대상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 혹은 혈청형 9개가 포함된 국가백신을 도입하는 부분도 모두 결국은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성실하게 협의 중입니다.

○박희승 위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인데, 지금 OECD 국가 중에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34개국이나 되지만 한국처럼 여성만 지원하는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좀 부끄러운 통계지요, 사실은. 특히나 좀 튀르키예조차도 올해 안에 남녀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9가 백신으로 지원 중입니다. 한국이 지원하는 4가 백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여러 개의 혈청형을 포함할수록 더 많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표에 보여 주신 것과 같이 많은 OECD 국가에서는 국가백신을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예방접종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성입니다.

○박희승 위원 질병관리청은 2023년 도출된 우선순위에 대해 최신 연구 자료 등을 검토하여 2026년 중 도입 우선순위 재산출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너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우선순위를 재산출하려면 도대체 언제부터 도입이 가능합니까? 로드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26년도에 다시 한번 연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업데이트 차원의 예정돼 있는 내용이고요. 어느 해이든지 그 해에 필요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개편은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진행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성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결국 또 이게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기 내 목표치를 계속 늘려야 되겠고, 남성 예방접종 지원 예산안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내년 예산안에?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정부 내에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주 긴밀하게 논의하고 노력 중입니다.

○박희승 위원 법안도 제가 발의해서 지금 심의 중인데 곧 통과하려고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질병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의원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상임위 안에서 충실하게 논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여러 정책적 퇴행이 많았습니다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정책 분야도 대표적인 퇴행 분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면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될 텐데요. 그런 과제 중의 하나가 기후대응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정부 모든 부처가 주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또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인 기후대응기금 조성하고 운영은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사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방향과 기조는 이야기하지만 실행은 잘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예산 운용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지난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89.9조 원, 약 90조 원입니다.

세부 부문별로 보면 부문별 감축 대책에 54조 6000억 또 기후 적응 쪽에 19조 4000억 그다음에 녹색산업 성장에 6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매년 연도별로 구별해 본다면 향후 5년간 매년 약 18조 원 이상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필요한 어떤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 규모를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는 약간 개념적 접근이어서 실제 기후대응에 꼭 집행되는 사업과는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진 사업 형식이다 이렇게 평가들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모아서도 2024년 결산 집행액이 9조 6798억 원에 그칩니다. 매년 한 18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계획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나마 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산 규모도 집행률도 더 낮아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 중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그런데 그 기후대응기금은 2024년 지출액을 보면 2조 3058억 원 규

모에 그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매년 필요 예산 18조 전체에서 보면 약 12.8%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주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대응기금이 2024년에만 부족한 게 아니라—만들어진 지 한 4년째가 됐는데요—계속 2조 4000억 수준에 정체돼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도 23년 0.4%에서 24년에 0.3%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굉장히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해서 기후대응의 실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족한 기후대응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얼마까지 확대 조성하는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아직은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정한 목표를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지만 최대한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체수입 안정화뿐만이 아니고 배출권 불균형 문제도 좀 해결하고 또 거래 가격도 조정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서 일단 최대한 조성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해서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 전환이라든지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왕진 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기후기금 예산이 상당히 불충분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기금이 현재 수입 구조에서는 앞으로도 그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주요 수입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화면을 좀 보시면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 다양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배출권 매각대금일 텐데요. 이렇게 기후대응기금이 몇 년째 정체돼 있는 핵심 이유 중의 하나가 적극적인 주 수입원이 돼야 될 배출권 매각대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은 문제하고 연동이 됩니다. 자체수입 기금 내 비중이 매년 전체 수입 중의 한 5~15% 수준으로 2024년 결산에서는 8.1%에 불과합니다. 그 핵심 이유 중의 하나가 배출권 가격 문제일 텐데요. 배출권 가격이 2019년까지 정점을 찍다가 계속 하락해서 현재는 10년 전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8000원대 수준입니다. 해외 EU나 이런 데 가격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낮은 배출권 가격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기후대응기금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의존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애초에 이 기후기금을 시작할 때 22년에는 배출권 매각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또 이월, 불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미봉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24개 사업에 104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예산집행은 당연히 효율적인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부총리님,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주 수입원인 배출권 매각대금을 안정적이고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텐데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현재 4%대에 머물러 있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 이것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배출허용총

량이 너무 넉넉하게 주어져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이것을 대폭 줄이는 배출권거래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데 또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속도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이 줄어들지만…… 저희는 그래서 이 사업을 기후변화하고 좀 관련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그 재원이라도 마련하는 등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가 환경부이지요? 매우 전문가이신 환경부장관님께서 혹시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 배출권거래제가 3기까지 진행됐고 내년부터 4기 배출권거래제도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유상할당 비율이 EU 같은 경우는 전력 부분은 100% 유상할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입니다. 이것을 대폭 높여야 하고요. 또 무상할당이 너무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라고 해서 무상할당을 하더라도 무상할당이 과잉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예비분을 뒤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지금 8000원대의 배출권거래 톤당 가격을 상당히 증액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4차 제도부터는, 내년부터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부총리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너무 사업들이, 기재부가 실제 사업을 제대로 기획해서 추진하는 부처가 아니고 각 부처별 사업들을 그냥 끌어모으다 보니까 용처는 다양하고 또 그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아서 성과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재정운용 관점에서 겨우 관리를 하는 기재부가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에 총괄 책임이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가칭 국가기후대응위원회 같은 행정위원회로 바뀌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바꾸는 것 이런 제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부처가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특히 또 김성환 장관님, 전문가 장관님 오셨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쪽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도개선도 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왕진 위원** 새 정부에서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한번 전면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논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큰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송기현 위원님, 김운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율의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송기현 위원입니다.

국토부에서 1차관님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소관은 2차관님 소관인데, 하여튼 24년도의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1조 7431억 9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현재 100%지요? 1차관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보면 계획 대비해서 잘 집행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부 사업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면 5284억 원, 30.3%가 집행되지 않고 타 세부 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사용됐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자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기현 위원 22년도부터 24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예산 중에서 전용·감액·불용 이렇게 된 것이 1조 72억 5900만 원, 18.5%가량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 대비해서 50% 이상을 다른 데 이전하거나 전용한 고속도로 건설 세부 사업 수가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전체 세부 사업의 20%고 실제 24년도에는 57.1%가 해당됩니다.

국회가 세부 사업 단위로 예산을 심의해서, 금액까지 심의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송기현 위원 이것 국회가 심의한 그것을 굉장히 침범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용과 전용 부분이 있고……

○송기현 위원 불용도 있고 그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세부 항목 간에 사용했는데 이·전용에 관해서는 먼저 국회에 계획 수립하는 부분과 보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역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해서 아예 사용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애초에 원래는 거기에 예산 배정이 안 돼야 되는 건데 배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애초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될 수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예타면제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전액 미집행된 것도 많아요. 2019년도 예타면제사업 중에서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산신항부터 김해, 울산외곽고속도로는 현재

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2019년도에 예타 면제된 건데. 그러면 예타 면제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빨리 공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산업이 발전될 거라는 기대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타면제사업 하는 건 그 지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차관님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대개 예타면제사업이 실제로 이행이 안 되는 것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송기현 위원 사업비가 10% 늘어나면 다시 기재부에서 필요시 실시를, 총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15%를 넘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과정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예타 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것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로·철도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데 철도는 덜하지만 특히 도로 사업이 이런 게 많거든요, 고속도로도 그렇고 일반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입체화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대체로 처음 계획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관리를 하지 않은 채 사업부터 확정을 해 놓고 예산을 받고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는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실제로는, 단위 사업별로 보면 전부 다 집행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세부 사업에서는 상당 부분이 아예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우리 국회도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올해 예산을 봐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가덕도신공항 사업 같은 경우도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거의 사용이 안 됐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송기현 위원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작년에 예산안 세울 때부터 사업자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지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로 관련된 부분, 도로 관련된 SOC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정확하게 잘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워서 국회에서 협의할 때도 국회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잘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에는 그렇게 됐었고 또 올해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말씀하신 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물론 저희들도 빨리 예산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집행이 안 될 걸 세우는 것은 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될 게 뻔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세워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점을 잘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혁신도시특별회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송기현 위원 그것이 직접건설비용,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비용 또 기반시설 만드는 비용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이나 이런 것이 이전할 때 지원하는 비용들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24년도 혁특회계 총예산이 5839억이었는데 5634억, 96.4%가 실제 이런 사업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공자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다 사용됐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혁신도시특별회계가 목적인 사업에 사용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아주 소액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혁신도시특별회계 재원이 원래는 혁신도시 이전하면서 있었던 종전 부동산 매각 이런 대금으로 충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어 냈고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되어 있는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좀 더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재원 부분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송기현 위원 또 관련돼 가지고 지방소멸 대응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정부 때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두 번째는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 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이것을 3개의 큰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세웠는데 실제 사업 집행률이 72.2%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좀 더 자세히 못 하겠는데 균특회계 중에서 지원계정이 있고 자율계정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자율계정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지원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것이고 자율계정은 각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자율계정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지역지원계정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한 7 대 3 정도 되지요, 대충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과 연결된 사업이 잘 안 돼서 실제로 지역소멸 대응 사업이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자율계정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역소멸 대응 사업이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게 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걸 제가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 보조라고 해 가지고 자율계정 쪽으로 재원을 많이, 한 3배 정도 금년보다 늘릴 겁니다.

○송기현 위원 잘하셨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잘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지역이 선택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송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혁특회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균특회계 중에서도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잖아요. 혁신도시에 관련해서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역할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지방에 자율적인 포괄 보조를 넓혀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재부에서 한번 예산안 편성지침 이 부분에다가 혁신도시 부분을 추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송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 저는 대한민국 필수요리를 붕괴시킨 주범이 실손보험과 비급여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실손보험과 통제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가 맞물려서 상승효과를 내면서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하고 환자들은 의료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중환자 보던 의사들은 수익성 높고 의료사고 위험 없고 당직 안 서도 되는 비급여·실손보험 하는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요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런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실손보험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4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없이 진료를 받은 환자들과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비교했더니 실손보험을 가지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1조 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손보험 재정이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공단 지급금의 10%가 넘는 금액이고요.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국민들이 연간 건강보험료를 30만 원을 덜 내도 되는 돈이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6년 동안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막대한 규모의 돈입니다.

물론 이 11조 원이 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손보험 진료비 1·2위가 미용주사, 도수치료로 이루어져 있고 미용주사·도수치료 진료비로 실손보험에서 연간 지급하는 돈이 6조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과잉진료, 의료 남용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실손보험 때문에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무너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데 실손보험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부도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금융 당국과 함께 발표한 바가 있고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윤 위원 이제까지 나온 대안으로는 저는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에 여쭙보겠습니다.

이 감사원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봤습니다.

○김윤 위원 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건강보험 진료를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들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청구한 내용을 연결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실제로는 미용수술을 해 놓고 실손보험에는 비염 치료를 했다고 청구하고, 건강보험에는 환자의 질병을 다 청구하면서 실손보험 청구할 때는 실손보험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진단명만 꼭 빼고 청구를 합니다. 이런 식의 허위 청구, 부당 청구로 인해서 누수되는 실손보험금만 2.6조 원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감사원 보고서는 전체 실손 청구 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연결이 되고 금액이 큰 것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실제 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2.6조 원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냐면 전체 실손보험 지급금의 16%,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으로 따지면 보험료 7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실손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니 실손보험사가 적자를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를 어떤 방식으로 메꿔 왔냐면 허위 청구, 부당 청구를 근절해서 재정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매년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손보험료는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인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료기관들의 허위 청구, 부당 청구를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을 해서 실손보험사의 적자를 메꿔 주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부분을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실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잉진료 부분에 대한 유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험료를 올린 저 숫자가 실제 올려야 될 퍼센트보다도 저희 감독 당국의 지도하에서 많이 낮춘 겁니다.

○**김윤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수궁할 수 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두 부처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사원이 분석한 것처럼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청구 자료 2개를 연결해서 분석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심사하는 데 쓰면 됩니다. 심사하면서 양쪽 자료가 같은지, 다르면 왜 다른지…… 허위 청구, 부당 청구를 걸러 낼 수 있으면 건강보험 재정 11조, 실손보험 재정 2.6조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복지부장관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수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필요성에서 공감을 하고요. 아마 심사를 하려면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게 법령적인 정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 위원** 법은 국회에서 고쳐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하시겠다고만 하면.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들은 당연히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를 강화해서……

○**김윤 위원** 복지부장관님도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정보를 연계해서 누수나 부정 청구를 줄이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일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김윤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검토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윤 위원** 기재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살거나 똑같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55개 의료생활권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평균이 1이고 1보다 높으면 평균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은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이고 1보다 낮으면 의료 수준이 좋은 지역입니다.

사망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경기도 여주·이천 진료권, 평균 대비 70%가 높고요. 제일 낮은 지역은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강릉입니다. 0.76, 평균에 비해서 24%가 낮습니다. 강릉이 낮은 이유는 강릉아산병원이라는 좋은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간 격차의 최대 차이는 2배가 넘게 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의 해소라고 하는 과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추경 예결위 질의에서 2차관님께서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하는 데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복지부에서도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한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모든 정책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의 골든타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윤 위원** 만약에 올 하반기에 기금이 설치되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기금이 만들어져서 운용되는 것은 내년, 내후년입니다. 그사이에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중환자 보는 교수들 다 빠져나가고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됩니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법이 올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신속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고양갑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우선 기재부장관님과 감사원장님께 저번에 있었던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기는 했습니다만 23년도·24년도 예산에서 56조 4000억 원 적자, 24년에는 30조 8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최악이었지요. 23년도에도 그랬는데 경기가 나쁜 걸 알면서도 24년도에 결국 무리하다가 또 핑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도의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세수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 도의적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감사원 감

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4년은 특히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33조 1000억 원을 줄여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0조 8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났습니다. 기재부가 자체평가한 것 보니까 23년에 F등급, 24년에 G등급을 부여하면서 세금 추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줬는데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적자로 추계가 되는 것은 항상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잡을 때는 흑자로 추계가 많이 되더군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단 우리 돈이 없습니다라고 짜게 추계해 놓고 나중에 가서 돈이 생기면 추경을 편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막무가내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저희 돈 많습니다’라고 돈을 내밀어 놓은 것은 아닌가. 기재부가 정권에 따라서 이런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그런데 문제가 진짜 있는 것은요 국회가 심의 의결한 방향과 다르게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을 편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10조의 흑자가 났다 이러면 추경을 편성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국회랑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왜? 이것은 대통령이나 기재부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와 함께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국가재정법상 한 20~30% 정도 범위 내에서는 기재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조항을 이용해서 각종 기금을 이리 밀고 저리 밀어서 이렇게 땀땀을 한 것, 장관님 이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좀 답변드리면 공직자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성희 위원 매우 공교롭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공교롭게 또 이렇게 오비이락이 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김성희 위원 개선 문제는 지나갔고요. 추경을 왜 편성 안 하셨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추경을……

○김성희 위원 물론 장관님이 하신 건 아니긴 하지만 기재부의 논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가 나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메꿀게’ 아니면 ‘니들 돈 가져가지 마’ 이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랑 교육청들이었습니다. 23년·24년 전부 다 4분기에 가서, 즉 가을 겨울에 모든 걸 정리할 때쯤 가서 23년도에는 18조 6000억 원, 24년도에는 6조 5000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미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이라는 것이요 80%는 인건비니 뭐니 해서 고정으로 다 나가는 돈이고 겨우 한 10% 남짓한 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요령껏 쓰는 것인데 기재부에서 깎아 나간 돈은 이 돈의 거의 전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아우성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것도 한겨울 다 돼서 4분기에 통보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집행을 하게 했던 당사자, 감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습니까, 징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희 위원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원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얘기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23년도에는 18조 2000억 원, 24년도에는 4조 원의 외국환평형기금이라는 걸 썼지요. 이제 국민들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외환의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 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로 구분해서 보는데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냥 좀 투박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국가에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국가가 대출을 받으면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거지요. 1000만 원 대출받은 걸로 달러를 삽니다. 그러면 대략 한 1만 불 정도를 살 수 있겠지요. 1300대이지만 그렇다 치고. 1만 불을 놔두고 우리가 국채를 발행한 것, 1000만 원에 대한 국채를 발행했지만 이걸 금융성 채무라고 하지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빚을 갚아 버리거나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적자성 채무는 뭘니까? 돈을 써 버려서 세금을 다시 걷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돈을 뜻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23년도에서 24년도에 여러 기금 등을 활용해서 46조 7000억 원을 기재부가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돌린 겁니다. 즉 다 달러는 아닙시다만 달러로 갖고 있으면서 빚을 낸 것은 금융성 채무니까 이걸 안전하다고 보는데 이 쟁여 났던 달러 전부 다 한화로 바꿔서 그 돈으로 모자란 예산 다 써 버리고,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금융성 채무나 적자성 채무나 국가 채무는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틀리게 한 부분이 있나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일부를 돌려쓴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일부가 아니라 40조가 넘는 돈을 쓰셨는데 그렇게 일부라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이게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문제라 본다. 지금 장관님조차도 그냥 그런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에 부역한 것에 일조를 했다고 보고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왔기 때문에 이것 감사원 감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하여튼 저희들은 어쨌거나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혹시나 적자가 많이, 이렇게 세수결손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추경을 하든……

○김성희 위원 국회랑 상의를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감사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안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감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22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문제인 정부 때 흑자 났을 때요 열아홉 페이지에 걸쳐서 이거 흑자 난 거 문제다라고 하면서 징계까지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음 해인 23년도에는 56조나 세수결손이 났는데 결산 보고서에 이 내용이 없지요? 감사원이 이 문제 눈 감아 주셨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아닙니다. 23년도에는 그랬는데 올해……

○**김성희 위원** 아니, ‘그랬는데요’라니요. 56조 예산이 핑크가 났는데 감사원이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24년도에는 세 페이지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무마를 해 주신 거예요.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요, 분석 자료만 치는 거고요. 사실 23년·24년 저희들이 22년도에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조치를 한다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감사원장님, 저는 하여튼 감사원장님이 처음에 국회에 들어오셔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말실수하셨을 때, 그렇게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엄정하게 감사를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최악의 세수결손을 만들어 내고 국회가 심의 의결한 방향과 달리 수십조 원의 예산을 마음대로 바꾸고 국가재정에 타격을 입힌 무능한 기재부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관련된 이슈 기재부장관님께 하나만 좀 더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직접 보고하라고 하고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수결손 관련해서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산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라고 하면 국가가 재정을 쓰는 거지요. 보니까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산재보험금 지급액이 16조 원인데 일반회계, 즉 나라는 세금을 213억 원 0.13%만 넣었습니다.

장관님, 이거 법에는 총지출액의 몇 %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산재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그나마 또……

○**김성희 위원** 3% 쓸 수 있지요.

제가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그런데 5000억 원까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적게 쓰면 장관님 본인도 마음이 안 가실 거 아닙니까? 같은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상에도 기금운용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임금채권보장기금도 적립금이 지금 고갈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8200만 원 세금을 쓰셨더라고요. 이것도 운영비의 겨우 0.49%에 불과한데 이거보다는 지출을 좀 더 하시고 기재부장관도 노동부장관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인 기금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증액을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의 수지를 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일반회계 전입도 해 주고 이런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저는 기본적인 예산을 좀 더 늘리셔서 그래서 기재부장관님도 노동부장관님 못지않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국정과제에 복무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고용부장관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김성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성북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구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중소벤처부장관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부장관님, 중소벤처부의 중요한 업무 영역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들 지원 보호하는 정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중소벤처부장관님이 벤처 쪽의 굉장히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셔서 혹시 소상공인 쪽 문제는 좀 관심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와서 제일 처음으로 최우선해서 보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회복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김남근 위원 그래서 이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플랫폼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문제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 배달앱,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배달앱 문제가 심각한데 한 번 보통 매출을 일으키면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조사해 보신 거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정확하게……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부에 대한 원망이 심한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없다. 수수료 부담 때문에 제대로 영업이 안 된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런 조사 자체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가지고 수수료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김남근 위원 언론마다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만 KBS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무료 배달이라고 하지만 이게 소비자한테 무료라는 얘기고

그 배달비는 고스란히 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다음에 광고비 이런 것을 합치면 한 40% 정도 된다 그러합니다.

보통 한 번 배달하는 데 평균 매출액이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2만 5000원 중에서 한 40% 내고 나면 이익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달에서는 다 적자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BS에서는 숙박업체…… 숙박 플랫폼도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김남근 위원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통해서 대부분 예약들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수수료가 한 11.5%고 기본적으로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러고 계속되는 할인행사 해야 된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체들도 숙박업을 통한 예약에서는 도저히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 이런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김남근 위원 다음을 한번 보시면, 계속 몇 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배달수수료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배달의민족·쿠광이츠 앞에서 한겨울에 농성을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거의 한 석 달 가까이 농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회에 와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입법해 달라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들 잘 아시지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하고도 한번 간담회 같은 것 하면서 이런 얘기 좀 잘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목소리를 한번 직접 전달해 보겠습니다.

‘대체 자영업자들의—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서—뭐까지 빨아먹는 플랫폼 기업들이 무료 배달이라는 무기를 들고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및 배달비를 뺏어 간다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하소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료 배달이라 그러면서 소비자한테는 무료지만 배달비 6000원, 7000원을 전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도록 하니까 그것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저 플랫폼들 욕심에 소비자, 라이더, 업주 모두 피해 보는 상황입니다’, 배민·쿠광·정부·공정위에서 드디어 손을 본다니까 그것을 환영하는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미국에서는 과징금을 300억씩 물렸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하다, 제대로 우리 문제를 안 보고 있다 이런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플랫폼 관련 수수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냐’ 그랬더니 한 72% 정도가 이 플랫폼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마 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피자, 치킨, 빵집 이런 데로 하게 되면 거의 100%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로만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문제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들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가격 차별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매출하는 데 40%씩이나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매장 가격에 비해서 배달 가격은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게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왜 배달 가격을 지금 못 올리고 있나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를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최혜대우 정책이라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배달 가격을 올리게 되면 아예 검색 순위에서 검색도 안 되게 만들고 있고 프로모션 이런 것에서 다 빼 버리고. 그러니까 배달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최혜대우 요구,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일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공정위가 조사를 해서 저는 과징금 물리고 이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배달의민족하고 쿠팡이츠에서 과징금 제재를 하지 말고 동의의결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결국 동의의결이라는 게 과징금이나 이런 것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김남근 위원 여러 조치도 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할 테니까 좀 유예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생방안 마련했습니까,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정위가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플랫폼에서 제때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물건은 이미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자는 돈을 다 냈는데 정산을 안 해 주고 45일, 60일씩 질질 끌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티메프 사태라는 게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지요. 그동안에 그 돈을 가지고 티메프 측에서 해외 기업들 인수하는 데 쓰거나 다른 데 다 써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셀러들이 판매대금 못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사건이 티메프 사태인데……

그래서 그때 이후에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든 대규모유통업법이든 정산기간에 대해서 만연히 45일, 65일 이렇게 두지 않고 다른 데처럼 한 7일 이내,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입법을 추진하겠다 했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직 입법은 안 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일방적인 거래조건을 정하는 게 문제예요.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배달의민족에서 6.8%에서 9.8%로 한꺼번에 거의 한 30~40%를 인상을 하는데 그때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입점하고 있는 단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단체라든가 유통상인단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단체들은 ‘우리한테 협상권을 달라. 우리도 같이 협의해서 거래조건을 정해야지 우리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아서 되겠다’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그게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의 단체협상권이라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입법이 잘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배달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하면 동의의결을 해 달라, 이런 게 아마 쿠팡이츠하고 배달의민족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지금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도 들어와 있고 여러 소상공인단체들 다 들어와 있고 배달라이더도 들어와 있고 또 합의에 따라서는 무료 배달이라는 게 실제로 무료 배달이 아니니까 소비자도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좀 더 달라 그래서 소비자단체도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국회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이런 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진척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정부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되려고 그러면 정부가 들어와서 먼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서로 합의본 것들은 영세상인들,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9.8% 받는 건 너무 심하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훨씬 낮춰 받자 이런 건데 그러면 소상공인·영세상인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상인들 스스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이걸 공정위원장님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소상공인 정책을 할 때…… 기본적인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중소벤처부의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걸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중소벤처부도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보

는 데 필요한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영세상인.

예전에 여신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상공인·영세상인·일반상인 이렇게 차등을 뒀 가지고 만들 때 그때도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요. 중소벤처부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 소상공인 정책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아 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중소벤처부장관님,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보내서 가지고 연구용역,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지금 상생국장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고요 관련 부분들은 더 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속도 있게 사회적 대화가 되도록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동의의결 할 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를 볼 때까지는 절대 동의의결을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요청 받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무료 배달, 최저대우 요구 등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관련 혐의가 신고가 되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이것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인데 배달라이더들의 최저운임, 산재 사건 같은 것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재 가입하는 문제 이런 건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기초실장 나와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기초실장님, 여기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공정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지고 사회적 대화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도 입법을 해야 돼요. 이것은 통상 이슈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제가 문제가 되면 그것은 떼어 가지고 소상공인 진흥법에다가 넣어 가지고 해결하더라도 공정위하고 중소벤처부가 상의해서 가지고 이 2개의 입법을 통해 가지고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된, 중소벤처부하고 공정위가 합의된 방안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김남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전 유성을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윤석열 정권을 호칭할 때 무능 무도 무책임, 3무 정권이라는 말과 함께 거짓말 공화국이었다는 평가가 꼭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의 취임사였습니다. 그런데 지켜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VIP0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내란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할 뻔했습니다. 시장경제는 주가조작범 김건희의 뇌물경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김건희가 주인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왜 민생경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국민 누구나 알 것입니다. 국정이 아니라 술주정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1% 이하 성장률이 올해 이전까지 총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마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딱 네 차례 있었습니다, 1980년 오일쇼크 그리고 1998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모두 대한민국 경제의 핵폭풍 같던 사건들이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무능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2023년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보서는 그때 너무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황정아 위원** 윤석열 정권에는 또 다른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전재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건전재정.

그런데 실상은 긴축은 긴축대로 해서 경제위기에 대응도 못 하게 만들고 재정 여력은 오히려 쪼그라드는 마이너스의 손이었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2년간 발생한 세수결손 규모가 87조 원에 달합니다. 2년 만에 87조 원의 세수결손을 낸 정권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없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저는 정권 초기인 2022년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초과세수 53조 원으로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한 뉴스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하겠다고 하더니 천문학적인 초과세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급격한 세수결손이 발생합니다.

기재부의 능력이 1년 만에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경제가 망해서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윤석열한테 보고하지 못해서 숫자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정책의 방향성

은 당파색을 떨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바뀌면 시대정신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윤석열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세수가 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하여튼 워낙 경제 상황 변화가 급격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된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세수라는 게 과거의 어떤 추세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세수 전망을 못 한 측면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황정아 위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요. 기재부 내에 진상규명 TF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원장님께서 감사원에서 하반기에 감사한다고 하니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원장님, 하반기에 관련해서 감사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감사계획 잡혀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 감사와 별도로 기재부 내에 진상규명 TF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검토 이후 저희 의원실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문재인 정부 초기 3년간 단순 산술평균으로 1.9% 오를 때 윤석열 정부는 8.2%가 급등합니다.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대를 바라보고 있고 미국에 뒤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무능과 내란의 여파로 2년 연속 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외평기금으로 67.4조 원을 싹짓돈으로 사용하고 가계부채가 2000조에 육박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50만 명을 넘어서고 1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가 1만 5000개, 역대 최소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게 말이 됩니까?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그 진철을 밟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확대, 관세협상에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 체감경기인 기업심리지수도 소비쿠폰에 따른 민생회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전략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 심리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도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5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하겠다는 국정 방향이 기업들에게 이제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진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투자와 규제혁파입니다. 재정이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저는 AI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제도를 선언하는 정도의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족쇄를 먼저 달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AI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를 환경이라든지 국가 안전·안보 이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철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황정아 위원** 트럼프 정부는 AI 실행계획을 발표해서 29개 분야의 정책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106가지의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규제장벽 및 과도한 규제 철폐입니다. AI 개발 도입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규제·지침 전면 재검토·폐지, AI 혁신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는 이전 행정부의 모든 최종 동의·금지명령 전면 재검토 후 필요시 수정·폐기 추진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산업 진흥을 발목 잡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황정아 위원** 특히 AI는 모든 산업에 접목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할 핵심 성장 플랫폼으로 봐야 됩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AI 도입만으로 GDP가 12.6%나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AI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처럼 한국형 AI 실행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실행 백서를 넘어서 실행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문신학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황정아 위원**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번 방미 성과 중 하나가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및 SMR 협력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에너지 인프라가 없으면 AI와 반도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공히 SMR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주무부처 등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실증 분야는 과기부가 그리고 산업진흥과 수출 분야는 산업부가 담당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신속하게 협의에 나서 주시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SMR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SMR 진흥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과기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이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한수원과의 협약 때문에 벌써부터 SMR이 특정 해외기업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0년 로열티보다 더 큰 걱정은 에너지 패권 기술로 도약할 가능성을 가진 SMR 기술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어 괜찮다라는 낙관적인 입장도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서야 되겠습니까, 국익에 관련된 문제를?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과기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황정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성남 중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성남 중원 돌봄정책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구윤철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수진 위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별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을 확대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 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는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민생회복쿠폰 대상자 선별 업무 이것 국가정책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로 인한 초과근무는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수진 위원 지난 20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발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사과 하셨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수진 위원 어떤 정부가 잘못을 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현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을 실행할 때입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계획했으나 낙동강 유역의 경우에 대부분 설계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2023년 이후에는 남은 예산만 쓰겠다며 편성조차 안 했습니다.

2019년에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는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했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수진 위원** 장관님, 수문 개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시고 취·양수시설 개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진행상황 점검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장관님, 그리고 하수관로가 우수관과 오수관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면 생활악취가 매우 심합니다.

우수관·오수관 분류식화 추진을 위한 2024년·2025년 정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산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2044억 그리고 3074억 이 정도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자료에 따르면 분류식화 비율이 2024년 기준 85.8%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91.1%지만 성남시는 79.5%입니다. 성남시도 신도시인 분당구는 100%인 반면 원도심인 중원구는 39.8%입니다.

성남 중원구 각 동별 현황을 보면 100%도 한 군데 있지만 대부분 20%대 이하, 일부 지역은 1% 이하입니다. 이 정도면 50년 전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심각해 보입니다.

○**이수진 위원** 하수도법에 따라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올해 안으로 2026~2035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성남시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곧 세워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관님, 원도심 지역에 이렇게 낮은 하수관로 우수·오수관의 분류식화 비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 재정투입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내년부터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할 일을 미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우면서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60년대 말 국가정책으로 강제이주당하면서 제대로 된 상하수도시설조차 없이 우리 성남 중원을 일구어 온 주민께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노원구청장 시절에 직접 당현천 복원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건천이었는데요 지금은 양재천보다 더 멋진 하천으로 바뀌어 있

는 상황입니다.

○이수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 복원은 폭염으로 인한 도시열섬 문제 해결과 주민께 쾌적한 쉼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도시재생과 성장의 자원입니다.

성남 중원의 대원천과 같이 많은 원도심 지역에는 과거 개발 위주 도시정책으로 자연하천을 복개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남 중원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대원천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이 필요해 지자체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대원천은 국가하천이 아니어서 중앙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지방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재정을 어디서 동원하든 간에 성남시민들이 자연생태와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이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산업자원부가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2027년까지 총 10개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이수진 위원 차관님, 전체 산업단지 1330개 단지 중에 10개라면 이게 0.75%에 불과합니다.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지 않아도 2030년까지 20개로 확대하는 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20개, 2030년도 적어 보입니다.

1974년에 조성되어 50년 이상이 된 성남산업단지, 원도심에 근접해 있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문화산단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수진 위원 국가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2% 중 성장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2%, 수출이 1.8%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장관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수진 위원** 장관님,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이에 따른 각종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이 7월 30일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장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조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지침 내용처럼 통상임금 여부를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인 해당 부처,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빠르게 확인을 해 줘야 일선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됩니다. 각 부처가 빠르게 답변하도록 기재부가 나서야 됩니다. 기재부가 얘기 안 하면 부처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일부 기관에서는 당장의 수당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한번 체크를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내년에는 지침 자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법원 판결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해 빠른 지침 확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수진 위원** 관련된 전반 상황 점검하시고 대책 세워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수진 위원** 환경부장관님,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7월 기준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이 220만 명인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한**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이 2024년 160억 원, 2025년에도 160억 원이 편성돼서 매년 100% 다 완판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사용에 국민 참여가 높습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한**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8월에 벌써 예산이 다 소진돼서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산 증가 규모가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 수 증가 속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에는 대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한** 기재부장관님이 열심히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기재부장관님, 정부의 정책과 시그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일회용 컵, 일회용 스트롱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겠다고,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때 하겠다고 해 놓고 윤석열 정부 돼 가지고 갑자기 처벌 조항도 없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일회용 빨대라든지 생산하시는 분들이 거의 폐업하시고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 분명한 시그널 보여 주셔야 되고 기재부장관께서 확실하게 예산과 관련한 지원을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환경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오셨네요.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화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오려면 화순 군내버스를 타고 광주로 와서 지하철을 타고 광주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서울에 올라오는데요 기차표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장관님도 전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거의 표를 못 구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종덕 위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한번 봐 주십시오.

그래서 왜 이렇게 표 구하기 어려운가 봤더니 경부선에 비해서 호남선이 좌석 수가 5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호남 주민들은 이것 지역 차별이다, 열차 늘려 달라 이렇게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처럼 좌석이 가장 많은 KTX가 955석인데 이게 경부선은 115회를 가고 호남선은 전라선 합쳐서 46회를 가더라고요.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지역균형발전과 헌법적 권리인 교통 이동권 보장에서 보면 차별이지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호남선을 증편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27년까지 평택-오송 간 2복선화 공사가 끝나면 증편해 주겠다 이런 답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4년도 결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20년부터 27년까지 8년 공사인데 3조 4841억이 들어가는데 24년까지 집행률이 15%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진척률도 20%밖에 안 돼요. 이러면 이것 예정대로 공사가 될까요? 저희 호남 사람들은 공사 끝날 때까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전종덕 위원 증편해야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평택-오송의 복선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보고서 보니까 또 오송역 같은 경우는 재설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 공기를 맞추기 아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호남민은 이것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

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955석 되는 기차를 호남선에 더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KTX하고 SRT를 통합 추진하시면 됩니다. KTX하고 SRT를 통합하게 되면 일석사조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좌석을 많이 늘릴 수가 있지요. 지금 KTX는 2개를 붙여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KTX하고 SRT는 2개를 붙여서 못 다녀요, 왜냐하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가 합쳐지면, 통합을 하게 되면 붙여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석이 늘어나겠지요. 그런 일석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SRT는 민간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 점검이나 정비를 KTX가 하게 되면 좀 더 안전성이 강화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레일의 만성 적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SRT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 경제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운영이 일원화돼서 운영 효율화가 되고 국민 불편도 줄어 들고 철도의 공공성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통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것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종덕 위원 이것 관련해서 장관님의 입장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 말씀에 적극 공감드리고요.

좀 외람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난주에는 입석을 타고 내려갔을 정도로 호남선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질적 대책으로는 평택-오송 간의 복선화라든가 또 고속차량을 증편하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당면해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교차운행이라든가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차량이 많은 그런 것들을 좀 투입해서 최소한 균형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을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역대로 우리 호남 주민들은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이동권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을 꼭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종덕 위원 다음,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연금특위 그리고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활용에 기초가 될 중요한 자료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보고서가 국민들한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공

단에서 지난 2월 발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상정했다가 보류했어요. 그리고 국회의 연금개혁이 마무리되니까 5월 26일 날 회의를 열어서 영구 비공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 보도도 되니까 어제 갑자기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의 영구 비공개 결정을 뒤집고 다시 수정해서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관님, 이거 혹시 5월 말 영구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 보고받은 내용은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전망 연구가 KDI나 보사연하고 연구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서 모형을 좀 더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어제 갑자기 공개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공개 요구가 많이 있으시니까 위원회에서 재심의했고 일단 공개로 전환하고 향후에 그런 모형을 좀 고치는 걸로 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보완해서 공개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 당시 장관님은 안 계셨지만 행정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국민들 의견이나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것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도 하지 않고 임의로 영구 비공개했다가 다시 논란이 되니까 공개했다가,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그때 당시에 개혁을 하기 전에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더 나빠진다고, 내용 들으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서 노인 빈곤율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것을 명확히 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43%로 확정됐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정부의 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42%였습니다.

○전종덕 위원 정부의 안은 소득대체율 42%였어요, 거기에 자동조정장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안은 40%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구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니 정부안과 국민의힘의 안하고 많이 배치가 되니까 이걸 숨기고 비공개해서 은폐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단은 발간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이나 투명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연구결과가 추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한번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 자료를 나왔을 때 당시에 공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상세하게 공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논의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론이 좀 있고 논란이 있고 이러니까 감쌌다가 다시 영구 비공개 결정했다가 다시 공개로 결정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하고 그 당시 이 상황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발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간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연구보고서를 한번 검토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는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지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이미 의원들도 알았고 언론도 알았고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 밝히시고 제대로 조사하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고 제도개선해야 재발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위원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수화상병, 사과 배 등에 발병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입니다. 소위 말라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치료제가 현재 없습니다. 2015년 발생한 이후에 20년, 21년에 최고 정점을 찍다가 지금은 그 상태보다는 상태는 좀 완화됐습니다라는 전국 34개 시군을 중점방역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과수화상병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농촌진흥청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같이 참석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그때 참여한 농가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그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농수산물을 개방하는 것보다 이 과수화상병이 더 무섭다’. 그만큼 피해 농

가들, 그것을 경험한 농가들이 이 병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강도는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도 천안에 있는 과수화상병으로 완전히 폐원한 과수원을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이게 피해 입은 농가로서는 전체 재산을 다 잃는 것이고 또 몇 년 동안 다시 또 식재를 못 하기 때문에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습니다. 꼭 비단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전국 37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에 많은 제도개선이 추진됐습니다. 재배금지기간이 2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이 되고 또 농가에 대한 어떤 책임도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방역활동을 하지 않으면 손실보상에서 감액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책임성도 보장하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많은 제도개선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도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공동방제를 연 3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동방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방제가, 모든 농가가 동시에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을 공동방제라고 하는데 그 공동방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이 나간 그 수치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손실보상으로 나간 것이 70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142억이 나갔는데 그러면 22년도에 과연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공동방제를 강화했거든요. 그 효과가 그렇게 손실보상금의 감액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 주셨던 대로 미발생지역, 이렇게 차등을 뒀던 그 제도를 통합해 3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은, 몇 차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히 확대해서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이제는 발병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묘목이 과연 이것에 감염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무병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무병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세균에 감염되지 않은 인증된 묘목을 무병묘로 표현을 하는데 이 무병묘를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적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과수화상병이 여하튼 최근에 좀 안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 입은 농가로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현장의 수요가 많은 게 무병묘 보급 확대를 좀 더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공동방제하는 횟수를 지금보다

는 조금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꼭 좀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또 우리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부총리님,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특허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패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첨단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기술패권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AI·바이오·반도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도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허 심사의 기간이,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특허 심사 기간 지금 어떻습니까, 타국하고 비교했을 때?

○**특허청장 김완기** 우리나라가 사실 출원량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빼고는 지금 일본·중국·EU보다 상당히 좀 많이 늦은 편이고요.

○**이재관 위원** 예,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16개월이 걸립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이것도 심사를 최초로 시작하는 시점이 그렇고요.

○**이재관 위원** 자료화면을 보시면……

○**특허청장 김완기** 실제로 등록을 해 주려면 거의 한 23개월까지 걸립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니까 저것도 상당히 실제보다는 더 짧게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특허 처리 기간이 타국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엄청 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심사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저희가 우선심사제도라고 해서 평균적인 심사 처리보다 좀 더 빨리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야지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재관 위원**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특허청장 김완기** 기본적으로 심사관 한 분당 처리하는 심사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재관 위원** 타국이 100건 미만인데 우리가 200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예, 거의 200건 가까이 1년에 매년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재관 위원** 기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심사 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이것의 해법은…… 청장님, 해법이 됩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소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기술도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 최근에……

○**이재관 위원** 그 부분은……

○**특허청장 김완기** 심사관도 조금씩 증가가 되기는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심사관의 대폭 증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AI·바이오·이차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업화하는 어느 영역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AI 같은 경우는 보니까 22개월, 바이오는 17개월, 이차전지는 18개월, 전체 처리 평균 기간보다 오히려 더 깁니다. 이 부분은 국가의 어떤 기술경쟁력 차원에서 이걸 대단히 심각한, 단순히 특허청의 심사 처리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입니다.

부총리님,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은 그 안에서의 세입으로 어떤 세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거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다른 기관보다는 아마 또 특허료를,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한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특허청의 또 국가의 어떤 문제와 연관돼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행안부의 어떤 조직의 심사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일반 어떤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게 인력을 그동안에 많이 늘려 주고 또 외부로 이렇게 하는 인력도 늘려 주고 하는데 계속 또 특허 심사 기간이 늘어나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뭔지를 특허청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환경부장관님,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할 때 장관님 보시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아무래도 낙동강 유역의 보를 막아 놓고 그거를 농업용수나 다른 용수로 쓰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로 판단됩니다.

○**임미애 위원** 예, 제가 볼 때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21~23년에 걸쳐서 환경부하고 농식품부가 각각 양수시설 개선 사업 추진했습니다. 보를 개방해서 수위가 낮아지면요 저 물을 뽑아 올려서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되는 농민들 때문에 취수공의 위치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취수공의 위치

를 낮추는, 조정하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요 저 사업이 참 안타깝게도 1년 연 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체로 10월에서 다음 해 3월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농 한기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에 저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낙동강 주변에는 아시다시 피 하우스도 많고요. 겨울 내내 농사를 짓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환경부 취·양수 시설개선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보면 29.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하고 있는 사업은요 23년도 집행률까지…… 그러니까 이게 21년부터 23년도까지예요. 집행률이 6.2%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나마 환경부 사업은요 지자체에 교부하는 예산이고 보상 성격이 있어서요 이월된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20%가 좀 넘지만 농식품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금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림부 자료 한번 보시면요. 이게 16개 보, 101개소의 총예산이 526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까지 집행된 비율이 6%입니다. 24년까지 잔여로 집행된 것이 다 합치면 6.9%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불용처리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공약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환경부에서는 농민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도 참 4대강 재자연화, 우리 공약과 함께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이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양수장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영남지역에서는 정치적인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재자연화의 문제 아니면 농업용수의, 깨끗한 용수로 농사를 짓겠다라는 농민들이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슈로 다루어짐으로 해서 실제로 526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6%밖에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농림부가 지역주민들을 꾸준히 설득하고 이것이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식약처장님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여기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4대강 인근 농사짓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출 조사를 한 게 가장 최근은 언제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22년에 한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23년 1월에.

**○임미애 위원** 22년에 하고 그다음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아직 전체적으로 시험법을 개발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일라이자(ELISA)라는 시험법에서 LC-MS/MS라는 좀 더 정확한 시험법을, 7종을 확립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임미애 위원 4대강의 녹조 문제와 관련해서 물에서 발생하는 녹조 문제는 환경부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임미애 위원 지금 취수공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녹조의 취수 얘기신가요?

○임미애 위원 예.

○환경부장관 김성환 기존에는 취수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취수했고 또 그 결과도 3~4일 후에 발표했었는데요, 최근에 취수구 50m 이내에서 취수검사를 하고 그리고 당일 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임미애 위원 발표는 어디에다 하실 계획인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발표는……

○임미애 위원 그냥 언론에 하실 건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별도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해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녹조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관은 식약처입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22년도에 검사를 한 이후에, 당시 발표를 했을 때도 환경단체하고 끊임없는 논란이 생겼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도 이후에 취하지 않았거든요. 녹조 현상이 그 뒤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나아지지는 않았습시다. 그렇다면 혹시 식약처에서는……

제가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녹조 오염 우려가 있는 4대강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보관 중인 21년 쌀(40건)과 22년에 전국에서 재배·수확해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쌀·무·배추(90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도정한 쌀을 검사하신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임미애 위원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의 그 잔여물이 남아 있다면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매우 부족한 조사 방식입니다.

이것 개선하셔야 되고요.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 마련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일단 저희가 도정한 것을 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정을 한 것을 우리가 식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료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기존의 방식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도정한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환경부와, 관련 부처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여러 공동조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제가 볼 때……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호주에서는요 농업용수의 마이크로시스틴 관리 예비 기준을 마련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추적’이라는 다큐 시리즈를 보면 거기에 농민들의 절규가 나옵니다, ‘깨끗한 물로 농사지어야 될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은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 기준을 농림부에서 좀 마련을 해 주시고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식품관리 차원에서 식약처가 관리를 한다면 농산물을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농림부가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관련해서요, 이것 어저께 유명하 위원님께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22년 4월 4일 날 국무조정실·환경부·대구광역시·경북·구미·수자원공사 이렇게 6개 기관이 합의한 합의문을 살펴봤거든요. 당시 이 합의문에 서명을 한 분이 지금 부총리님이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당시 환경부장관이 서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정서 6조에 ‘협정을 해지하려면 협정을 체결한 6개 각 기관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 달에 대구시가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협정서 파기하겠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 뒤에 관계기관 회의를 했지만 협정 이행 못하겠다고 하는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협정서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MOU적 성격의 협정서이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파기를 해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만 제가 취임해서 그 현장을 둘러보니까 당시에 맺은 협정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협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정부기관이 한 협정서는요 정권이 어떤 정당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는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한 예.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임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께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겠다’ 이런 친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당신은 전사이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극찬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미래 동맹의 비전을 공유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일이라고 봅니다.

회담을 앞두고 우려가 많았다는 것은 취임 초기에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함께해 온 민주당에서는 쉽게 신뢰할 수 있지만 다른 당 그리고 또 정부 안에서도 그런 큰 신뢰가 없었다면 그런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교안보팀이 외국에 나가 일할 때, 대통령이나 외교안보팀이 나가 있을 때 국내에서 근거 없이 흠집 내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기초실장이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계시군요.

제 지역구가 광주 남구거든요. 그런데 김윤덕 장관님도 그렇고 아까 질문하신 전종덕 위원님도 그렇고 호남선 KTX를 보통 저희가 매주 한 서너 차례, 많게는 칠팔 회 이렇게 사용하는데 주말은 당연히 조금 밀리겠습니다마는 평일에도 상·하행선 막론하고 예매 전쟁이라 할 정도로 좌석 확보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은 무슨 표를 구하는 어떤 특별한 수가 있나 이렇게 알고 있다가 함께 표를 구하지 못해서 입석으로 가게 되면 놀라고는 하는데요.

한 해 철도 이용객이 호남 같은 경우 2200만 명 연간, 선로용량 부족 또 차량운용 한계로 인해서 어렵다 이런 답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송정역의 고속도로 재차율, 이게 뭐냐 하면 승객 대비 좌석 비율입니다, 이게 0.67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역이 0.39입니다. 1.7배가 호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리가 다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사이에 하루 열두 편의 항공편이 운항되는데 광주는 불과 두 편입니다. 이것도 아마 KTX에 더 수요가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8년까지는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에서 오송까지 2복선화가 되고 또 고속차량이 도입이 돼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조속히 그런 예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제가 지난 21대 선배 국회의원들, 호남지역 국회의원들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나,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 바로 해결할 줄 알았거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송정역과 용산역에서 시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중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편이 양이 더 큰 걸로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리고 비행기편이 지금 두 편인데 두 편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민들로부터. 서울과 광주 사이의 비행기편 증편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지금 워낙 KTX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저는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아까 고속철도 예매라든지 항공편 증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반드시 28년이 오기 전에, 이미 칠팔 년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요. SRT 같은 경우는 아예 표가 없습니다. 그건 뭐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문신학 산업부제1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정진욱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정과제 에너지 고속도로 2030년까지 일단 1차적으로 서해안 전력망과 그다음에 육상망을 통해서 한 20GW 정도를 주요 산업단지로 송전한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리고 국가기간 전력망법이 시행되면 또 조금 더 빨라지면서 한 2038년까지는 어느 정도 한숨 돌릴 정도는 될 거다, 지금 이런 예측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데 밀양 송전탑 사례도 보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얼마나 수용해 주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의 전력 소비가 약 44%인데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전원은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전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산지소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정진욱 위원** 이와 관련해서 RE100 산단, 재생에너지 산단 또는 지역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혜택이 있는 그런 산단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 모델로 했을 때 전기요금 특례라든가 세제혜택,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이 필수적일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균형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을 하더라도 기업이 과연 와 줄 정도의 혜택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RE100 산단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이래로 추진돼 왔던 균형발전 중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저희 정부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거꾸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앵커기업들이 내려갈 수 있게 아예 기업들 수요에 맞춤형으로 규제프리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원칙으로 삼고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정진욱 위원 여기에 이제 잘 준비된 특별법이 필요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광주·전남에서는 솔라시도를 비롯한 몇 곳이 다 잘 준비돼 있거든요. 입지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굉장히 중시했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저는 전시산업이라고 봅니다. CES라든가 또는 하노버 메세 이런 아주 지역을 살리는 그런 큰 세계적인 전시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브랜드가 있는 전시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한 열일곱 곳, 열아홉 곳 정도의 큰 전시장이 있어서 그것들이 잘 활용되면 외국 관광객도 오고 또 바이어도 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루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라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서 처음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2억 8800만 불에 해당하는 바이어 수출계약 성과를 냈거든요. 여기에 좀 더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우리 브랜드의, 예를 들어서 바이코리아 위크 같은 그런 것을 K-컬처와 함께 연결시키면서 전국에 바이어가 오고 그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전시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장관입니다.

○정진욱 위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입률이 1%가 안 되고 한 0.95%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정진욱 위원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정진욱 위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점포 철거해 주고 원상복구해 줘서 폐업을 돕는 사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정진욱 위원 이전에 400만 원에서 올 7월에 600만 원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렸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계속 늘려 가면서 지금 600만 원 올린 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 고시, 저는 이것을 신속 개정해야 한다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소영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정진욱 위원 1분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

지난 2023년 5월 조달청이 직접생산 확인의무를 이유로 해서 갑자기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이런 행정처분 내린 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외면하고 원전 중심의 드라이브를 걸던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전수조사 당시, 예민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당시 조달청장께서 현재 모당의 국회의원이고 정권의 하명에 따라 태양광 업체—호남지역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이야기, 호남 태양광을 손봐야겠다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권이 바뀌자마자 파다하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 행정처분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처분을 내릴 때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잉하지 않게 잘못된 것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처벌이 내려야 될 것을 아예 사업을 못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행정 사면을 이야기했고 또 추진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적극적으로 행정 사면 중기부장관님께서 나서셔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업체들과 소통도 하면서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정진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남 여수를 더불어민주당의 조계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전남 여수시를 국회의원 조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계원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한반도 KTX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간략하게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익산-여수 간 189km 구간의 철도 모양 보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계원 위원 이게 일반철도이고 구철도입니다. 이 노선에서는 15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노선을 별도의 전용철도를 만들지 않는 한 지금의 EMU-320이나 더 빠른 고속열차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내용이, 서울 남부 쪽에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 청주 그다음에 세종-북대전 사이와 전주(동전주) 그리고 남원, 구례, 동순천, 여수로 관통하는 직선 내륙선을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청주까지는 수요가 어제든 얘기했다시피 300만 이상의 수요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은 민자도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노선이고요. 또 청주에서부터 나머지 노선을 연결하면 그야말로 한반도의 철도 대동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과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호남선은 익산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송까지 복선화한다고 해서 증편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증편을 위해서는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리, 내륙선으로 분리가 되면서 증편이 가능할 거고요. 또 경부선도 이 한반도 KTX가 되면 증편이 가능해집니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권은 KTX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 남부권에서 세종으로 출근하려 쳐도 삼사십 분이면 충분히 출근이 가능한데 지금은 1시간 넘게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전주나 남원, 구례, 순천에 이르는 여러 문화·생태 관광이 활성화 되고 서울·수도권의 문화 관광 수요도 다시 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국토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예타 안에 부분직선화를 해서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돈을 태우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 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전체 노선을,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노선을 직선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분직선화로 애물단지 만들지 마시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한반도 철도 대동맥을 완성하는 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계원 위원 다음으로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정부 R&D 예산 관련해서 계속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계속해서 R&D 예산이 쑥 상승해 왔다가 2024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나눠 먹기 식 카르텔 아니냐. 그리고 건전재정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과학계를 사실상 범죄집단으로 내몰면서 묻지 마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계원 위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환갑 당시 훈련원 봉사 신분이었던 나대용에게 목선 기술이 뛰어난 것을 알고 거북선을 준비했고 판옥선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는 체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 한마디에 따라서 묻지 마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 손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고요.

영국에는 링펜싱(Ringfencing) 과학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계원 위원 어떤 제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

○조계원 위원 제가 보기에선 우리나라가 기술주도의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한 5% 이상을 R&D에 투자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낮아진 R&D 예산을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편성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액인 35조 3000억까지 이렇게 늘리는 등 R&D 쪽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1번 과제로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35조 3000억 규모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R&D 예산에 굴곡이 있기는 했으나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계원 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붕괴시킨 과학기술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농부아사침궐중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말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계원 위원 그러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토부장관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안타까운 항공기 참사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는데요. 그때 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로컬라이저, 소위 방위각 시설이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계원 위원 지금 여수공항의 경우에도 그보다 더 높은 4m의 로컬라이저가 있는데 지금 재설치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끝났고 개선 공사를 위해서 인허가와 계약을 준비 중에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울러서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는 로컬라이저와 함께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수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울산이 2000m이고 여수가 2100, 2.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안전에도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올해 말까지 해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항공 수요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수 지역 공약에서 ‘여수공항을 부정기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고 활주로를 연장하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COP33 등 국제 행사에 대응하는 한편, 남해안 해양 관광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꼭 좀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으로 김영훈 노동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사업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조기에 재취업하면 2분의 1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본 의원실이 확인해 보니까 ‘동일 사업주에 채용 시 구직 노력 등 고려 없이 지급에서 무조건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 많이 받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법적으로 그게 제외되는 게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러니까 동일 사업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용역 실시하는데 개선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동일 사업주라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취업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조계원 위원 이 때문에 2019년 9월에 권익위에서도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합리화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권고했는데 제가 살펴보니 2021년도에 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걸 회신했다고 했는데, 저도 살펴보니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타당성도 있고 이래서 개선 방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과 의의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우리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빠르게 해서 다시 일터로 돌려 보내고……

○조계원 위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라고 구직수당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를테면 A시 체육회에서 일하다가 A시의 공공 도서관으로 재취업했으면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수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게 행정 해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계원 위원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어쨌든 그 방법 연구용역 해서 빠르게 개선 방안 고민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위원장대리 이소영 예.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자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해외 파견 노동자는 현행법상 해외에 파견할 경우에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지주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는 가입해도 국내에서 별도의 가입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래서 임의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헝가리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지난 2023년에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21살의 한국인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21살의 이 한국인 노동자 청년은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제도에 함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현황 자료에 사망자로도 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표기가 안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현행법상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어쨌든 새 정부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든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든 다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의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우리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고용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조계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병진 위원** 국토교통부장관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이병진 위원**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장관님 마련하시겠어요, 마련하지 않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마련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역주택조합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병진 위원** 그걸 미끼로 많은 서민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가 되면 각종 빌미로 공사비가 상승됐다라는 이유로 해서 추가분담금을 요구합니다. 그런 건설사가 한국에 있다, 없다?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병진 위원** 서희건설이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나토 당시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 청탁성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에게 양재동 불법 비밀 대선캠프 사무실 제공합니다. 부사장은 14억 원의 뒷돈 수수로 지금 구속기소가 됐어요.

장관님, 혹시 서희건설을 중심으로 지주택 피해 사례 정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전국에 10개 내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특별점검 진

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예, 좋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674억을, 입주 전에 말이지요, 증액이 됐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1억 80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지역구에도 있어요. 2018년도에 최초 분양할 때 84평방미터 2억 7600만 원이었는데 4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억 7000만 원이 상승합니다.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라든지 자재비가 인상됐다고 핑계를 댑니다. 정작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조합원들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적 악행입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도 특별점검 지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병진 위원 합동점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택의 화양지구도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여기가 1차와 2차가 있는데요 1차, 2차 다 포함해서서 해야 됩니다. 1차 역시 피해 사례가 만만치가 않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합동점검 하신다니까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혹시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로또청약이라고 들어 봤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병진 위원 서울은 로또청약입니다. 과열이지요. 그런데 수도권 외곽, 지방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권 외곽은 지금 심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 485 대 1, 성동구 440 대 1, 동작구 수방사 160 대 1입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평택입니다.

○이병진 위원 고맙습니다. 평택을입니다.

장관님도 전주시장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 지역은 아주 정반대 현상을 보여 주고 있어요. 인천의 검단 지역이라든지 평택, 안성, 인천 이런 지역은 사실 한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세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저렇게 평택 고덕신도시 LH 공공분양은 109세대 미분양으로 금액만 한 34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검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162세대로 미분양 금액이 무려 6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임에도 서울 중심지는 로또 청약이 되지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극심한 양극화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그런 지방과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현재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런데 서울 그렇지요. 전북·충남·경북 한번 보세요. 경쟁률이 아주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계시지만 같이 붙어 있어요, 충남 지역하고.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외곽인데 지금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어떤 과세특례 같은 게 있다는 말이지요, 양도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혜택.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수도권·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열인데 외곽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아주 상당한 주택시장 위축의 한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노동부장관님, 8월 30일은 무슨 날입니까? 금년도 8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8월 30일……

○이병진 위원 예, 며칠 지나면 8월 30일 되잖아요. 오퍼칼하이테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600일 말씀……

○이병진 위원 예, 바로 고공 농성 600일입니다. 작년 1월 8일부터 8m 옥상에 올라가서 고공 농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악화돼 가지고 지금 중단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도 7월 말 농성장 방문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다녀왔습니다.

○이병진 위원 현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청춘을 다 바쳐서 일했는데, 노조가 있어도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파업 한 번 안 했는데 불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고당한 게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 회사가 또 평택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찾아갔는데 아주 패essim입니다. 사장이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나는 이런 기업체 세상에 처음 봅니다. 아주 패essim합니다. 고용승계도 아니고 신규 채용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장기화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어요. 그러면서 보험료로 525억 원을 타 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또 한국 로펌을 통해서 NCP에 참여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12월에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떤 플랜 B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하여튼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백방으로 노력하실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단순 민간 분쟁이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하는 사회적 노동문제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공감합니다. 다만 외국투자기업이라고 하는 한계도 약간 있는데 지금까지 외투기업이 단물만 빼먹고 한국 노동자들 고용에 무심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12월에 NCP 조정 패소한다면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법적 형식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고용 책임도 회피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정돼 있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이결? 외국기업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다 보호돼야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더 이상 이렇게 거리라든지 철탑 위로 내몰리지 않도록 노동부장관께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이병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님이십니다.

○**차지호 위원**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 차지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산의 교통 상황을 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차지호 위원**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오산의 24만 명 인구들의 상당수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 문제를 겪고 있고 오산IC 근처의 교통정체가 특히 심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민 대다수가 하루에 10만 시간이 넘는 시간을 길에서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생산성의 낭비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오산의 교통 상황을 보면서 다음 5년, 다음 10년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계획을 제대로 정비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산IC 바로 옆에 있는 동탄에 초대형 물류센터가 생긴다는 얘기를 저희가 접하고 굉장히 큰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려 지상 20층, 지하로는 6~7층, 연면적이 51만㎡ 달합니다. 축구장 73개의 크기지요. 그게 오산IC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2025년 6월 화성시장을 만나 직접 동탄물류센터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화성시장도 이것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조치

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교통의 문제는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그리고 시민들의 고통을 아주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이 지역, 동탄2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사업을 원안대로 가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거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는 오산시민들은 사실 참담함과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시설들이 강행되면 이미 극심한 교통난을 겪으면서 가족들과 보낼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허공으로 버리고 있는 오산시민의 고통들이 훨씬 더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그간 오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들 그리고 오산시의 도시개발계획들에 큰 차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인접 지자체의 생활권과 도로망을 철저히 외면한 채 형식적인 절차로 밀어붙인 이번 졸속 심의를 사실 절대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심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다수, 오산시민의 대다수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원치 않아서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장관님, 이번 교통영향평가가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굉장히 졸속으로 심의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수요 예측과 대책들도 굉장히 미흡한 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화성시가 물류센터 조성 최종 보고서를 심의 개최 이틀 전에야 오산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하려는 게 사실 의도적인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오산시민의 안전과 생활권을 저는 부디 말씀드리건데 이런 식으로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하고 그런 논의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식의 원안 가결이 갑자기 일어나다니요.

오산시민은 물론 동탄시민들까지 지금 물류센터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익과 상식의 편에 서서 즉각 시정에 나서 주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장관님, 다시 강조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입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왜 특정 기업에 이렇게 이익이 가는 부분만 생각하고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장관님,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 주체인 경기도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중앙부처 차원에서 걱정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지역은 10년 전과 5년 전과 지금이 현저하게 상황들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만든 계획들, 그런 도시계획들이 시민들의 현재의 고통들을 가중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차지호 위원 부디 우리 오산의 시민들이 가족들과 보낼 시간, 이런 시간들을 길에서, 더욱 심한 교통지옥 속에서 보내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 세교3지구가 새롭게 조성계획들이 있습니다. 오산시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현재 2025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차지호 위원 그리고 지난 2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했고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도위 심사와 지구지정 고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교3지구는 2009년에 지구지정이 한번 취소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2009년에 됐지만 11년에 지정 취소 이력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높고 사실 여기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 나갈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장관님께서 중도위 상정 및 심의 일정과 지구지정 고시 목표 시점과 LH가 제시한 25년 3분기 지구지정계획을 국토부의 공식 이행 목표로 수용·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꼭 보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장관님, 취임하시고 여러 현안들로 바쁘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챙겨 주셔서 저희 오산시에 있는 교통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가능한 빨리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남은 시간은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문제가 사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리고 온도가 4℃ 올라가는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을 때 올해 말까지 약 320경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온도를 1.5℃로 유지했을 때, 탄소중립을 통해서 가까스로 유지했을 때조차도 170경 원의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나머지 150경 원의 피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기후 적응 문제와 탄소중립 문제를 굉장히 균형감 있게 배치하고 예산들을 배분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논의되는 전문가 그룹들도 기후 완화와 같은 탄소중립 문제, 무언가를 예방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온도를 유지 못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절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면밀히 보았습니다. 사실 기후대응기금이 굉장히

영뚱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이 참기름을 제대로 짜는 신사업에 쓰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게 일부는 약간 맞지 않는 사업에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차지호 위원 저는 기후대응기금의 용처와 참기름 짜는 게 무슨 상관인지 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원금이, 사실 많은 지원금이 제대로 용처를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쓰이고 있고 이런 과정에 기후대응기금 내 적응 사업 비중이 22년 5.4%에서 23년에 7.6%로 올랐다가 25년도에 6.3%로 다시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대응기금의 기후 위기 적응 투자사업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기후 재난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잃도록 위협하고 있는 것을 매년 목도하고 계시면서도 이 대응기금의 용도를,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파트에 대한 용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기름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중기계획에서 관련된 투자 비중을 최소 몇 %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후대응기금의 세입을 좀 늘려 가지고요 그래서 재원을 확충하는 게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배출 탄소를 줄이는 것하고 적응하는 부분인데 적응하는 부분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응 쪽 예산을 어떻게 더 늘리는지가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 않는 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9개 사업에서 한 1200억 정도를 빼서 다른 사업,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4차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담아 가지고 최대한 늘리고 또 예산에서도 뒷받침하는 노력을 통해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적응에서 우리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재정계획의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 관련된 기금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균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 저는 국무위원들께 우리 사회가 지금 세습 사회, 세습 자본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는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시절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부총리님,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관련해서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등 준비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최기상 위원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과거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내일채움공제가 있었고요 청년도약계좌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가입 대상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가입 기간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우리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이라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시행해 봤는데 이 부분도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후원자가 모집이 안 되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국가가 우선해서 하고 추가로 부모 등이 납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여간 면밀히 준비하셔서 우리 사회가 부모의 부가 자녀의 삶을 결정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국세청장으로 가신 임광현 의원도 법안을 내신 게 있고요.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도 법안을 내신 게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 혹시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자연적 상속대로 맡겨 놔더니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한 세대의 전체 자산을 다음 세대에 상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시행했거나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부모로부터 받은 자연적 상속이 만들어 낸 차이를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특히 청년이 사회에 막 나왔을 때 출발선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이 사회적 상속의 의미를 지금 채워 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와 청년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국무위원분들께서는 아마 왼쪽에 가까우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국민들께서는 속상해하시기도 하지요. 또 오른쪽에 가난의 대물림을 느끼는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전히 언론에서는 젊은 나이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조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1세기의 상속은 사실상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된다,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이 말은 출발점을 물려받는 세대 간 릴레이

경주를 하는 셈이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경기가 끝나면 다음 경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세대 간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출발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자녀들의 세대는 저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 부분을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처럼, 스무 살이 돼서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자산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최소한의 공정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이 제도에서 담았다는 것을 두루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태어남의 불평등을 거듭남의 평등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할 수 있는가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은 다 인정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출생의 불운이라고 느끼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출생의 불운이라고 느끼는 분들한테 법과 제도, 문화 등으로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고요. 정치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 헌법에 있는 가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의 결과물로서 부모와 상관없이 나도 인간의 존엄을 지닌다고 느껴야 되고 그 준거는 자기 형성의 자유를 충분히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다음 측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을 말씀드리다가 결국 재산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유재산권의 절대화. 그런데 저는 늘 의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자유를 한번 보세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냥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 아래에 보면 또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선거권,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된다’는 표현을 언제 쓰느냐 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은 천부인권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2번이 있고요. 3번 부분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결정을 할 것이냐가 결국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시다만 사유재산권의 절대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헌법의 정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널리 알려진 토마 피케티의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을 조화롭게 다룬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산권을 평생 유지하는 일이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지에 대해서 따져 보아야 되는 거지요, 그때그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아마 소득세율을 어떻게 부과하고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에서는 심지어 ‘영구적 토지개혁과 같고 영구적 혁명과 같다. 다만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조용한 혁명인 셈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아이자립펀드 그리고 청년미래적금인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기재부에서 그리고 우리 부총리님의 관심이, 저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모와 상관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공정과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부총리께서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제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셔서 이전의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마칠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상속 그리고 특히 우리 미래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느낄 수 있는 불평등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도를 보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전에 태어난 나는 뭐냐 그다음에 또 이게 부모님들이 안 하고 국가가 전액으로 해 줌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소외를 느끼는 분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최대한 사회적 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슬기롭게 설계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부총리님, 혹시 우리나라에 유전이 터지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잊을 만하면 이따금씩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이런 것 아니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요새 우리 정부가 돈 쓰는 것들을 보면, 정부뿐만이 아니지요. 미국에 가서 수백조씩 투자하겠다고 톡톡 얘기하고 내년 예산도 700조를 훌쩍 넘어서 730조에다가 국채도 200조씩 발행하겠다고 이런 것 보면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유전이 터졌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제가 야당 위원이지만 혹시 우리나라에 유전이 터지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겠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당연히 알려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그중에서도 실업급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도 잘 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게 있고 이게 국정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안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부총리님, 이것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본격화는 안 되고 이렇게 국정위에서 하는 단계 정도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국정위에서 제안을 해서요 아마 정부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부총리님, 이것 하게 되면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추정은 해 보지 않았습시다만 아직 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천하람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추산을 했는데 최대 한 1조 원 정도 추가 재원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부총리님, 지금 우리 실업급여계정이 흑자 상태입니까, 적자 상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년은 흑자인데 내년 되면 이게 거의 적자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천하람 위원 금년에 흑자인 것 확실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금년까지는 그래도……

○천하람 위원 흑자의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실업급여계정이 금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흑자로 전망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이 실업급여제도가 개편이 돼서……

○천하람 위원 부총리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고안계정을 지금 보고, 실업급여계정은 마이너스로……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지금 실업급여계정에 보면 공자기금이 꽤 들어가 있어 가지고 표면적으로 보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4조 2000억 정도 적자 상태지요. 그리고 올해 재정수지도 당연히 수천억대 적자고 예산을 수립한 것보다 항상 초과지출이 되는 게 작년 올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지가 계속 적자인데 추가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은 실업급여 중에 특히 실업급여계정

은 제도개선을 좀 하면서 또 새로 제도가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이 부분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AI의 경쟁에서 당연히 이겨야 되고 AI로 인해서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 아마 AI로 인한 실업, 취업절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보도가 나왔는데 은행 콜센터 직원분들이 이제 AI 상담원으로 대체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되게 와닿았던 게 저도 최근에 은행에서 뭐 연장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사람인 줄 알고 받았는데 AI 상담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뭘 하겠다 그러면 다 이해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저도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이 와 있구나.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실업들이 당분간 발생할 여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AI로 인한 실업 위기의 심각성 지금 인식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기술 전환이 일자리를 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실업급여를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 필요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업급여를 일각에서는 우리 커피 탈 때 쓰는 시럽급여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총수급자가 169만 명인데 두 번 이상 반복 수급하신 분이 49만 명, 세 번 이상 수급하신 분들도 11만 명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20회에 걸쳐서 1억 이상을 받아 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반복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오히려 실업급여제정의 건전성을 높여 놔야지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제도개선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말씀하신 대로 모델 해저드라든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실업급여제정이 어려워진 이유 중의 하나는 또 모성보호 육아급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에서 이걸 차지하다 보니까 계정을 분리하는 것도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사실 장관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육아급여 같은 부분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지금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발적 퇴사 부분에까지 이렇게 늘리겠다 또 이런 반복적 수급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취하겠다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실업급여의 자금원이 고갈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빠르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건 알지만 그냥 쉬었음 하는 친구들 중 한 70%는 또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쉬었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한 번 더 기

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검토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모델 해저드나 부정수급 이런 부분들 단속 철저히 해서 꼭 확인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2030 청년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율이 그렇게 썩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그분들을 무슨 극우다 이렇게 공격하는 정치인도 있고 한테 이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적인 다수의 성실하게 살아 가는 2030세대에 어떤 역차별이라든지 상실감을 작동하는 방식으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좀 곤란하다.

물론 저도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업급여제정이 아주 여유 있고 넉넉하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나는 매달 고용보험료 내고 하는데 퇴사도 안 하고 또 적당한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소득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실 특별한 복지 혜택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자산 격차는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내가 이 돈 받아 가지고 돈 벌어서 집이라도 한 채 살 수 있겠나.

그런데 어떤 데에서 보면 나 실업급여 받아 가지고 몇 달 동안 여기 놀러 간다, 나 몇 번째 이거 받았다, 그런데 나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느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래서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저도 청년들이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어떤 특혜성으로 뭐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더 어떤 의미 있는 그런 혜택들을 주고 또 어떤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AI 관련한 실업 위기는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자꾸 AI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물론 해야지요. 경쟁력 해야 되는데, 지금 판교 같은 데들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실은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더들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문과생 중에서도 코딩 좀 가르쳐서 사실 밀어 넣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내보내지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천하람 위원** AI랑 같이 코딩하면 되는데 굳이 평범한 수준의 사람을 쓸 필요 없거든요. 실제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정당 업무를 효율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프로그래머분들을 좀 고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노트북 켜고 프로그래밍 계속 해 보더니 ‘야, 우리 프로그래머 안 뽑아도 되겠다. AI랑 같이하면 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저희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챙겨 가면서 돈 아껴 가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도 이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의 중복수급을 막는단든지 제도 개편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저희들 일반회계나 또 공자기금에서 계속 밀어 넣을 수도 없고 고민은 많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돈 쓸 데는 많고 갈수록 이제 위기를 많으니까요 현명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자리에서 하려다가요 환경부장관님 눈을 보고 질의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산업부차관님과 경제부총리께서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장관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곧 제출해야 됩니다. 고심이 많으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소영 위원** 우리나라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6.6%입니다.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목표지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 3년을 허비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30년 목표도 허덕거리는 상황에서 그로부터 단 5년 뒤인 2035년 감축목표를 그보다 훨씬 높은 과감한 숫자로 발표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일 거라고 저도 짐작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IPCC 6차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2035년 감축목표는 2019년 순배출량 대비 60%,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61.2%……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35년 감축목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 권고 내용은 IPCC 6차 보고서대로 2018년 대비 61.2% 이상의 감축목표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35년 61.2% 이상의 감축?

○**환경부장관 김성환** 현재의 조건으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소영 위원** 장관님, 제가 생각할 때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고려한 감축목표는 61% 이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성을 고려한 감축목표는 그 이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정부가 50%대의 감축목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감축목표를 정할 때 책임에 따라 정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 여력과 달성 가능성에 따라 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문제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책임에 따른 감축목표가 옳은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장관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도 가능성으로만 따져 보면 정말 어려운 목표지요. 그 목표 발표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불가능한,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님과 제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끌어 내려고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했을까? 과연 그 목표가 지킬 수 있는 목표이고 달성 용이한 목표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주 미미하더라도 우리 목표는 떳떳하고 책임에 걸맞은 목표여야지만 우리의 현실이 다소 목표와 떨어져 있더라도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인

식할 수 있고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 여력과 약속 달성 가능성을 이유로 해서 이 당위적 목표를 쉽게 포기하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의 감축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감축 의지를 낮추는 핑계와 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이 문제에 진심이시고 고뇌가 크실 거라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약속을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좀 굳게 먹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부장관님이나 경제부총리님이나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같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대해서 십분 공감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김성환 장관님께서 최후의 보루라는 것, 이재명 정부 안에서 장관님이 후퇴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될 거라는 것을 꼭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잘 해야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서요.

국토부장관님, 이 늦은 시간에 간사가 지역 현안을 가지고 질의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예결위 간사가 죽을 등 살 등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한 지역 현안도 분명히 있거든요.

위례과천선 본선 노선 문제 그리고 2차 연장 사업 문제 그리고 주택가 인근에서 많은 문제 일으키고 있는 의왕ICD 컨테이너 물류기지 통합 문제, 과천정부청사 재창조 프로젝트 문제 이런 것들을 서면질의로 드릴 테니까요 특별히 장관님께서 직접 보고받고 좀 챙겨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잘 챙겨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그러면 남은 질의시간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일곱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성산의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국토부장관님, 밤늦은 시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창원 지역에 있는 문제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3월 15일 국토부가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 관련된 국가산단을 새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창원 제2국가산단도 포함돼 있고요. 이게 103만 평으로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 속에서 올 2월 25일 날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다른 산단들은 진행

이 돼서 예타 신청 및 이렇게 지금 죽죽죽 나가고 있는데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 국토부가 여기에서 일제시대 때 1920년대에 개발됐던 광산이 발견이 돼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대안을 다시 내라 이렇게 해서 대안이 만들어져서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 9월 달에 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중도위 심사가 있는데……

그다음 그림 좀 보여 주시지요.

이 103만 평, 약 100만 평 중 40만 평 정도가 저렇게 제외구역으로 해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월 심사에서 반드시 중도위 심사를 통과해야만 이게 진행이 됩니다.

전임 장관님께서서는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통과 여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폐광산 때문에 일단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나중에 전략사업 재선정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그 말씀은 제외구역 40만 평 제외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보완됐기 때문에 중도위 심사 통과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원래 요구했던 게 저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고맙습니다.

만약에 저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수요가 더 많으면 저것이 확대되거나 또는 제외구역을 더 정밀조사했을 때 좀 더 축소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도록 행정적으로 좀 더 열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여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도적으로도 기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만약에 산단이 부족하게 되면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통해서 일정하게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 민원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그리고 또 최근의 원전산업 등등 주력 전략산업들, 전통 제조업들…… 기존의 제1국가산단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아주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부락을 드리구요.

물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다르게 처리되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그다음에 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시나요? 복지부장관님 나가셨구나.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허성무 위원 좀 작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에서 민원들이 자꾸 올라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려면 수강생들이지요, 이분들이 1년에 한 팔구만 명씩 되는 것 같은데 실습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광역지역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 경기 등은 1시간을 실습을 하게 되고 경남, 부산, 광주, 강원, 제주는 8시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하고 또 실습을

해야 되는 학생하고 좁은 집에 가면 8시간을 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대상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 1시간 이렇게 해 놓고 한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의 담당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깐 빨리 고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하겠다. 똑같은 국가자격증인데 어느 지역은 이렇고 어느 지역은 저렇다면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의식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차관님,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담당 국장입니다.

○허성무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상의드리고 장관님께 말씀드리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법률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에 의거한 복지부의 행정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고 당장 복지부에서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서 한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예, 내부 상의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과기정통부장관님, PPT 한번 봐 주시지요.

국민과 함께 이 의혹을 꼭 파헤치고 싶어서 다시 한번 PPT를 마련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4이동통신, 제4인터넷뱅킹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3년 2월 15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통신사와 금융은 공공재 성격이다라고 하면서 제4이동통신과 제4인터넷뱅킹이 시작이 되는데 우선 과기부에서는,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만 기준으로 해서 이통사를 선정했다, 그래서 사업성이라든가 부실기업 여부는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진행에 4000억 원의 정책자금 그리고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고 하는 특혜성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이 사업 수행이 선정된 사업자의 책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몰취 않고 그냥 끝내 버린 그런 특혜가 있었다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감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문제냐면 스테이지엑스라는 컨소시엄이 4300억 원의 제4이동통신을 낙찰받았는데 우선 주도적인 스테이지파이브라고 하는 그 기업 4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부실기업입니다. 자본잠식 상태인데 이런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거고.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한 더존비즈온 100억 그다음에 신한투자펀드 1·2·3·4호까지 합해서 1000억인데 이 두 회사가, 오른쪽을 보시면 제4인터넷은행에도 그리고 아이엠에스모빌리티라고 해서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 씨, 조영탁 씨가 관여됐다고 하는 이 회사에—이 회사도 물론 자본잠식의 부실회사입니다—30억 원을 투자해서 김건희 씨의 어떤 입김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뇌물성 지원을 해 줬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2023년 2월 달에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업에 더존비즈온과 신한투자펀드가 다 관여를 하고 있고.

더존비즈온의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황상무 씨라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을 했던 사람이 더존비즈온의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시민사회수석을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파이프 4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는 이 법인의 최대주주가 기존에 카카오였는데 이것이 변경이 됩니다.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조합 안에 김건희 BP패밀리라든가 권력실세층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곁들여서 한꺼번에 봐야 이 제4이동통신의 비리가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부총리님과 국세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 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총 신고 건수, 예컨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0만 건 중에 기존에 관행처럼 기준시가로 한 것이 23만 건이었고 그다음에 시가로 기준을 삼은 것이 7만 7000건인데 시가 중에서 감정평가로 한 것이 4만 200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7만 건 중에 4만 건에 불과한 감정평가를 지금은 이 규정을 바꿈으로써 23만 건, 지금 기준시가 기준으로 한 것들을 다 감정평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증여세가 2배 혹은 10배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고 조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가라는 것도 사실은 실거래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감정평가로 추계를 해서 판단한 가격인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바꿔 버리면 조세 저항도 있고 과연 정확한 감정평가가 될 것인지, 또 대상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이것을 세무사협회에서도 굉장히 의문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총리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은 부동산 자산 가입입니다. 그리고 세목은 상속·증여세입니다. 즉 부의 대물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시가 320억 원짜리 성수동의 꼬마빌딩을 물려받으면서 5분의 1도 안 되는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하는 사례 또 예를 들면 시가 140억 원짜리 논현동 단독주택을 물려받으면서 5분의 1 수준인 37억 원에 신고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의 변칙적인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자산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에 나온 것처럼 무분별하게 모든 상속·증여에 확대할 행정력도 안 되고 또 예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부동산 자산가 중에 시가하고 괴리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행령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상위법인 법률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국세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상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에 대한 법치주의에 조금 미약하다면 저희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개념을 확장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상속·증여세를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특이한 케이스, 기준시가가 생각보다 좀 낮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등 한정적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는 범위 그리고 시행령이 조금 그러시다면 법으로 하는 검토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기준시가 중에서 감정평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감정평가 방법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어야 조세 저항도 줄고 또 이게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 공감을 합니다.

○김승원 위원 그 점을 정책 협약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노종면입니다.

김윤덕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노종면 위원 앞서서 안 계실 때 차관님께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 방치 건물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잠깐 언급하다가 시간 때문에 중단했는데요. 장기 방치 건물에 대한

정비·재활용을 위한 법제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다.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데 그 건물의 극히 일부, 지하 일부 등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법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그런 입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 국토부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뭔가 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령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왔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조금 더 차근차근 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음,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지요.

이 건물은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20여 년 전—정확하게는 2001년입니다—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저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개장했던 대형 쇼핑몰 건물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시지요. 지금 저곳이 원도심, 제가 있는 지역구 인천 부평의 가장 중심부의 한가운데에 저렇게 큰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현재 상황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24년 동안 방치돼서 펜스에는 녹이 이미 슬었고 주변에는 불법 주차가 횡행하고 내부로 접근이 가능해서 매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건물에 이미 있는 법들로는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공직후보자들이 공약을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 저 건물 지하 한 귀퉁이에 한전의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소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곳이 전국에 얼마나 더 있는지 국토부는 파악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수십 층 빌딩이라도 단 한 개 층만 사용이 되고 있으면 그것이 그 상태로 수십 년이 방치되어도 우리 법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이런 건물을 위시한 장기 방치 건물들, 전국에 수만 개에 달하고 그것을 자산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수십조 원에 이를 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 정확한 입장을 바로 세워서 이러한 문제에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 부분 말씀……

○노종면 위원 필요하면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요. 또 구체적인 추가 사례들도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일단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의 내용도 국회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희 의원실 검토 결과는 다음 PPT 보시면 좀 이해되시겠지만 물음표 처진 곳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다른 개념들이 이미 있지만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은 예를 들어서 지상층이 통째로 다 방치돼 있지만 지하에 일부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1분 남아서 한 가지, 이견 질의는 못 드리겠네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전철을 급행화하는 방법이 대형 공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킵·스톱 방식의 운행 방식 변경 솔루션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이 방식이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요. 이게 적은 사업비로도 운행 방식의 변형을 통해서 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이 상태로 그냥 적용 안 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저는 국토부가 용역이라도 좀 해서 정책 판단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서울과 인근 도시를 잇는 수도권 지하철 전철망이 매우 촘촘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거리의 이격 때문에 생기는 운행 소요시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할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좁히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같은 노선인데 서울 구간의 배차간격과 바로 연결되는 인접도시의 배차간격이 차이가 커요. 이것들을 계속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드린 이 스킵 앤 스톱 방식이 그런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토부에서 용역 등을 통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서면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수진 위원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계획법상의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이 되면 여러 제한이 완화됩니다.

성남산단과 같은 도시지역 산단은 산업과 주거, 문화, 상업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도시와 산단이 함께 재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원도심과 접해 있는 성남산업단지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그 변경 권한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될 경우에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위례삼동선 신속 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 수서광주선 도촌역 신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수진 위원 자료와 같이 위례삼동선은 서울 강남과 광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로서 성남산단을 통과합니다.

장관님, 이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특히 성남산단과 성남 원도심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좀 속도를 내려면 기재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기재부와 협조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구윤철 기재부장관님 잘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그런데 이게 지금……

○이수진 위원 아니, 그 설명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수진 위원 수광선 자료를 좀 봐 주시고요. 이 수광선 노선이 기본계획 대비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야탑·도촌 지역에 나중에 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여러 개발 수요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도촌역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촌역 신설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성남시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난방 비율이 한 도시 내에서도 원도심이나 신도시나에 따라서 아주 크게 다릅니다.

현재 사업 완료 추진 예정인 17개 모든 신도시는 지역난방입니다. 성남시는 원도심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열원 공급시설 가용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부장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저희하고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협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마지막으로 평생 모은 돈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매년 천장과 벽으로 엄청난 물이 흘러내린다면 그 국민께서는 많이 상심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수진 위원 제가 실제로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영상을 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누수가 매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아파트가 공공기관인 LH가 건설시행사라는 겁니다. 현재 LH에

서 시공사 선정을 할 때 품질 평가와 하자 보수·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수진 위원 저는 그 평가의 실효성이 의심이 됩니다.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LH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또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LH에서 건설 시행한 아파트 누수 등 하자 보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대책 강화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곳에 저희 직원이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일단 거기부터 우선 실태 파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고요. 전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국토부장관님의 적극 행정에 대한 의지 감사드립니다. 몸도 안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각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국토부장관님한테 질문이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국토부장관님께.

아시다시피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농촌 지역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농민들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측량 불가 지역이어서 내가 있는 농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측량 불가가 뭘 말이지 싶어서 여러 자료를 봤는데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혹시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미애 위원 토지의 실제 현황하고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하고 면적이 일치하고 맞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야트막한 산지의 비탈면에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산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것이 평지화되었을 때 본인이 소유했던 농지의 면적만큼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측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개발은 되어 있으나 내 땅에 내 이름을 붙이고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고 사유재산으로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게 지금 지적불부합지인데요.

이게 문제가 조금 되기는 됐으나 봅니다. 이게 상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이런 건수가 전국적으로 550만 건이나 필지가 확인이 되었고 2030년까지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새롭게 측량을 하고 기점을 만들고 해서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겠다고 정부가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2030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약간 어려운 점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진척이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진척은 되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살고 계시는 전라북도도 이것 굉장히 많습니다. 1974필지가 아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면적만 치면, 평수로 치면 400만 평이 넘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제대로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정정이 된다면 해당 농가한테 이 사실이 좀 분명하게 알려져서 농가가 사유재산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토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이 토지의 비중이 국토 전체의 거의 15%가 되는 상당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리고 현재 예산이 서 있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문제 포함해서 원래 세운 계획대로 가능한 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해당 농가에도 이 사실이 정확하게 알려지게 통지되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부총리님, 국가재정사업 하면 성과평가 해야 되고 그것 종합해서 가지고 국무회의에도 보고하시고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 성과평가 내용을 보니까 이걸 너무 많이 통폐합을 해 놓으셔서 가지고 실제 성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국회 입장에서라도 개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성과평가를 일단 보고 그걸 평가를 저희도 또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간소화·통폐합을 해 놓으셨거든요.

PPT 한번 띄워서 약간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은경 장관님,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노란색 세 번째 줄에 해산장제급여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산장제급여가 뭔지 이런 것은 시간상 굳이 안 여쭙봐도 될 것 같고, 해산장제급여의 성과지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무래도 지금률로 목표 대비……

○천하람 위원 예를 들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지급률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느끼는 만족도 이런 게 성과지표가 돼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천하람 위원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장 한번 봐 주실래요?

그런데 이게 해산장제급여 성과지표를 받아 본 건데 생계급여 증가율, 생계급여 발급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 장으로 한번 가 주십시오.

이게 지금 세부사업은 생계급여랑 해산장제급여로 돼 있는데 단위사업 프로그램이 그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생계급여 만족도 가지고 이 성과평가를 다 통쳐 버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생계급여가 예산의 한 95% 정도로 비중이 많아서 그 지표를 주로 쓰는……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도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다 통치고 넘어가 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오늘 국방부장관이 안 계시긴 한데 이것도 급식 및 피복에 보면 기본급식도 있고 특수식량—이런 게 전투식량이겠지요. 그다음에 피복도 보면 개인피복, 특수피복, 개인용품 이런 식으로 썩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각각 예를 들면 기본급식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전투식량이 잘 나오는지 의복이 잘 나오는지 용품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성과평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게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단위로 위로 올리면서,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지표를 하나로 하다 보니까 또 저 문제가 생겨서요.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통쳐 가지고 장병 급식·피복 종합 만족도로 해 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이게 그러면 피복과 급여와 뭐 이런 것들이, 식단과 이런 게 잘 나오는지를 개별적으로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세부사업도 아니고 단위사업도 아니고 아예 위로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 버리시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2022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통폐합을 해 가지고 완전 윗 단위로 올리셨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과평가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충실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물론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평가하려면 행정력이 들어가고 하는 것도 아는데요. 그래도 이게 개별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사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각각에 대한 제대로 성과평가가 돼야 이게 국민의 삶이나

아니면 정말 성과를 내고 있는지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지금은 또 타협으로요 프로그램 단위로 올리면서 또 중요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몇 개를 좀 이렇게 붙이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듀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완전히 내릴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천하람 위원 그런데 부총리님, 2022년 전까지는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또 세분화됐다고 해서 확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2022년 전에 우리 정부나 기재부가 이거 개별 단위사업별로 성과평가 한다고 해서 정부가 마비되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강약 조절은 있겠지만…… 이것을 끌어올리면 당장 저부터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거랑 아닌 거랑 그러면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건데 이 사업은 중요하고 이것은 그러면 안 중요하다는 사업이라고 기재부가 아예 인증을 하는 거냐.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꼼꼼하게 평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제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단위로 가면 또 지표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뭉쳐졌다. 세부사업 중에서 좀 중요한 지표를 과거처럼 굉장히 밑으로 못 내려가더라도 2개를 융합시켜 가지고 제가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좋은 멘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천하람·허성무·차지호·조계원·안도걸·임미애·김승원·이수진·이재관·정진욱·이소영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1분 산회)

#### ○출석 위원(44인)

고민정 광상언 김남근 김대식 김상욱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유영하  
윤후덕 이강일 이병진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이종배 임미애 전종덕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한기호 한병도 허성무 황정아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최재해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2차관 임기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문신학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정책기획관 임호근  
환경부  
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  
장관 김운덕  
제1차관 이상경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직무대리 우영택  
국세청  
청장 임광현  
관세청  
청장 이명구  
조달청  
청장 백승보  
통계청  
청장 안형준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차장 서효원  
산림청  
청장 김인호  
차장 이미라  
특허청  
청장 김완기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임숙영  
기상청  
청장 이미선  
기획조정관 이정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차장직무대리 여성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